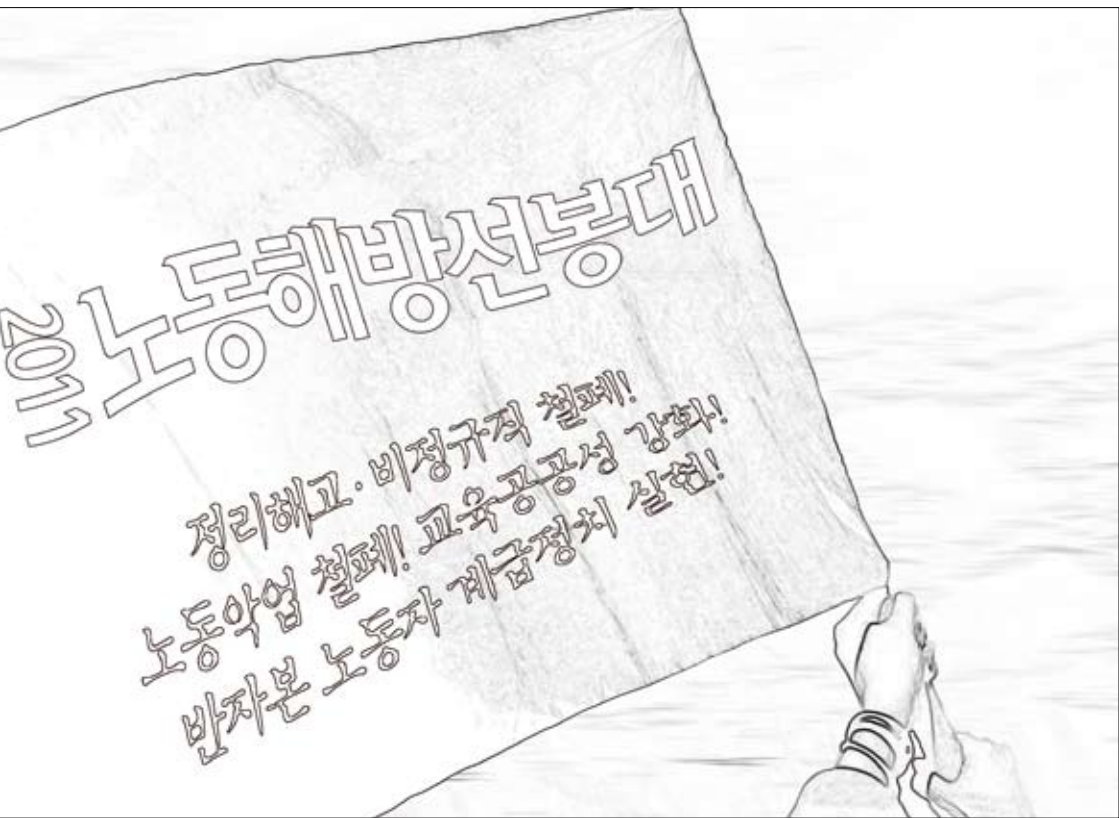


2011년 노동행태방선봉대

- 철폐!
- 비정규직 철폐!
-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고용공공성 강화!
- 고용안정법 철폐! 고용공공성 실현!
- 노동자본노동자본노동자본
- 반사본!



2011 노동해방선봉대 참가 제안	04
2011 노동해방 선봉대 목표	06
2011 노동해방 선봉대 투쟁 요구	07
2011 노동해방 선봉대 활동 일정	08
2011 노동해방선봉대 수칙	10

정세와 요구안 해설

정세총괄	12
1. 비정규직 철폐	21
2. 정리해고 철폐	24
3. 노동약법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	27
4. 민중의 교육권 쟁취	31
5. 반빈곤 연대	35
6. 한미FTA	46
7. 반자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	49

투쟁현황 해설

1. 제주 : 해군기지 반대 투쟁	56
2. 호남 지역 : 전북고속, 광주 도시철도공사, 광주 시내버스	61
3. 부산 지역 : 대우조선 사내하청, 한진중공업, 풍산마이크로텍	72
4. 울산 지역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경북 경산병원, 유성기업	80
5. 경기 지역 : 쌍용자동차, 시그네틱스, 장안 외국인산업단지	90
6. 서울, 인천 지역 : 삼화고속, 재능교육, 현대차 금양물류	106

2011 노동해방선봉대 참가 제안

노동해방 선봉대는 2007년부터 매년 11월 초에 전국 각 지역과 현장에서 사회변혁운동을 전파하고 당면 노동자민중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사회단체, 현장조직, 투쟁사업장, 노동조합 등 40여개 조직이 '노동해방선봉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노동해방선봉대는 2007년에 뉴코아-이랜드 투쟁국면에서 비정규 현장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해 순회투쟁을 전개했습니다. 2008년 촛불투쟁 국면에서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현장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천했습니다. 2009년 노동해방선봉대는 쌍용자동차투쟁과 용산참사투쟁 국면에서 자본주의 경제위기 고통전가 분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2010년에는 G20 반대투쟁을 현장과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접고용 철폐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지만 자본의 돈잔치는 끝날 줄을 모르고, 노동자민중의 빛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절규하며 쌍용차 해고자 15명이 목숨을 끊었지만, 자본은 돈잔치판을 키우기 위해 정리해고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용역강패와 불법을 동원한 노동탄압은 현장을 질식시키고 있으며, 복수노조를 활용해서 '노조죽이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늘 끝까지 치솟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은 사회에 나서기도 전에 빗더미에 올라앉고 있으며, 최저생계마저 꾸릴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는 건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빈곤층은 늘어났고 그들이 누려야 할 한 줌의

혜택조차 빼앗아가는 것이 정권과 자본입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대중조직들은 무기력과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분쇄를 위해 시작된 희망버스는 4차까지 성공적인 투쟁을 펼쳐냈고, 또 계속될 예정입니다. 투쟁의 현장에 민주노총은 없었지만, 투쟁의 현장을 메운 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습니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하기 위한 유성 투쟁이 힘겹게 이어질 때, 유성 동지들에게 힘을 준 것은 충남북지역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해방 사회변혁을 지향하면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제 노동단체, 현장조직,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이 앞장서 투쟁하고, 대중투쟁 전선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실천합시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운동조차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변혁운동진영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1 노동해방선봉대 조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공공현장조직-활동가연대회의/금속활동가모임/노동사회과학연구소/대학생사
람연대/사회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회진보연대/이윤보
다인간을/전국노동자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현장실천사회
변혁노동자전선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 활동 목표

1.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2. 등록금 문제 해결 및 교육공공성 강화에 복무한다.
3. 최저임금문제 해결 등 빈곤 철폐를 위한 실천투쟁에 복무한다.
4. 노동악법폐기,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현장투쟁에 적극 연대한다.
5. 자본주의 경제위기 상황 하의 반자본·반신자유주의투쟁 확대강화, 변혁운동진영 강화,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선전선동활동을 펼치고 투쟁한다.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 투쟁 요구

- 정리해고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철폐!
-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보장!
- 노동악법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 등록금 폐지-정부지원 확대! 사립대학 통제!
- 국립대 법인화 저지! 대학 기업화 저지! 교육공공성 강화!
- 1백만 빈곤층 방치하는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의 주거-생존권 쟁취!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동북아 긴장조성 반대! 전쟁반대!
- 한미FTA 반대! 노동자민중의 금융 통제-사회화!
- 경제위기비용 민중전가 반대! 노동자민중의 노동권-생존권 쟁취!
- 반자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 활동 일정

11월7일(월) : 제주

11:30	김포공항 집결, 제주로 이동(지방 참가자는 제주공항으로 합류)
14:00	제주공항 집결
15:00	강정마을 집결(기자회견 및 발대식)
19:00	해군기지 반대 및 변혁운동진영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결의대회(제주시 청 앞)
22:00	지역동지들과 간담회 및 조별 평가

11월8일(화) : 호남

06:00	기상
08:00	제주공항 출발(08:55 출발 항공편)
11:00	청주공항 도착, 전주로 이동
14:00	전북고속투쟁
17:30	공공운수노조 광주도시철도분회 투쟁(상무지구 도시철도공사 앞)
19:00	공공운수노조 광주시내버스 투쟁(민주노조 선전전 및 변혁운동진영 강화를 위한 호남지역 결의대회)(첨단 대창운수 앞)
22:00	지역동지들과 간담회 및 조별 평가

11월9일(수) : 부산경남

03:30	기상, 광주에서 출발
07:00	대우조선사내하청투쟁(대우조선 앞)
12:0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분쇄투쟁(85크레인 앞)
15:00	풍산마이크로텍 정리해고 분쇄투쟁(풍산마이크로텍 정문)
17:00	사전 선전전(부산역)
19:00	부산지역 변혁운동진영 결의대회(한진중공업 앞)
22:00	지역동지들과 간담회 및 조별 평가

11월10일(목) : 울산, 대구, 경북, 충청

06:30	기상
07:00	현대차 사내하청투쟁(현대차 정문)
13:00	경상병원투쟁(대구)
15:00	대구출입국관리소 투쟁
18:00	유성기업투쟁 승리와 변혁운동진영 강화 및 반자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전충청지역지역 결의대회(청주노동부 앞)
22:00	지역동지들과 간담회 및 조별 평가

11월11일(금) : 경기

06:00	기상
08:00	유성기업아산지회 출근투쟁(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09:30	유성기업아산지회 간담회
11:30	쌍차 정리해고 분쇄투쟁(쌍차 평택공장 정문 앞)
15:00	씨그네틱스 정리해고 분쇄투쟁(씨그네틱스 파주공장 정문 앞)
19:00	정리해고 분쇄와 변혁운동진영 강화 및 반자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경기지역 결의대회(수원역)
22:00	노동해방선봉대 단결의 밤

11월12일(토) : 서울, 경기, 인천

06:30	기상, 아침식사
09:00	삼화고속투쟁
13:00	재능, 현대차사내하청성희롱부당해고피해노동자농성투쟁(시청 근처)
16:00	노동해방선봉대 전체평가회
18:30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교육공공성쟁취! 노조탄압분쇄! 반자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변혁운동진영 결의대회(여의도 산업은행 앞)
20:00	2011 노동해방선봉대 해단식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 수칙

1. 2011 노동해방선봉대는 계급적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노동해방 사회변혁을 실천한다.
2. 2011 노동해방선봉대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노동운동탄압 분쇄 투쟁의 선봉에 선다.
3. 2011 노동해방선봉대는 개인주의, 나태를 배격하고, 노동자적 조직성과 규율성을 실천한다. 투쟁에 임할 때에도 선봉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4. 2011 노동해방선봉대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실천하며, 양성평등한 활동을 벌인다.
5. 우리는 노동해방투쟁의 동지로서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

2011 노동쟁쟁권원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아연 철폐! 교우공공성 실현!
노동자본 노동자 세력정체 실현!
박근혜

정세

2011 노동해방선봉대 정세 총괄

세계 금융자본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점거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추가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세계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시위는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가와 각국 정부들은 경제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구제금융과 긴축정책과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그 비용은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세계의 인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위선을 깨닫고 행동하고 있다.

다시 악화되는 세계 경제위기

미국, 유럽에서 경제위기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급한 불을 끄려고 각국 정부가 쏟아 부은 돈이 부메랑처럼 다시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실물경제마저 회복되지 못하고 갈지자걸음만 계속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새로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 앞에서 최강대국도, 저명하다는 경제학자도 누구하나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미국 정부는 경제위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달러를 대량 유포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위기를 조금 지연할 수 있을 뿐이었다. 미국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금융기관, 대기업, 가게가 보유했던 부실자산을 대거 인수

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증했다(2008년 71%, 2009년 84%, 2010년 94%, 2011년 101%).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미국정부의 재정적자 폭도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의 무역적자도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 50%를 상회하고 있다.

유럽은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염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리스는 1차 구제금융을 받은 뒤에도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럽연합과 IMF가 강요한 긴축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만 더 나빠졌다. 노동자 임금은 하락하고,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복지는 축소되고, 공공요금은 인상되었다. 결국 그리스는 다시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가와 금융기관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 민중에게 긴축을 강요하는 방식이 악순환을 만든 것이다.

미국은 이종적자가 다시 심화되면서 미국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위안화 환율 조정과 수출 드라이브를 꾀하고 있다.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중국 상품의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의 무역적자도 줄어들게 된다. 또 위안화 상승으로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는 내려가는 효과도 있다. 즉 미국은 환율 조정을 통해서 자국의 부담을 해외로 이전하고 탕감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미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미국의 수출을 늘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 둘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세계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은 근본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먼저 미국 민중들의 삶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대중적인 불만과 저항의 위협이 커졌다. 월스트리트 집거 시위는 이러한 불만이 표출된 계기이다. 최근 발표된 2010년 미국의 빈곤율은 15.1%로 13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세계 최강대국에서 4천6백만 명이 빈곤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이다. 또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중산층마저 몰락하고 있다. 미국 소득 중간계층 가구의 연간 소득은 4만 9445달러로 1999년 이후 11년만에 5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9%가 넘는 실업률도 대책없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윤율의 저하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자본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미국의 이윤율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약간 상승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하락하는 추세다. 이번 경제 위기로 금융투기로 이윤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자본의 전략이 파산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위기 대처 과정에서 금융과 실물 경제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반면 자본은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동자 민중에게 위기 비용을 전가할 뿐이다.

노동착취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국

경제위기가 세계를 휘감고 있지만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전망이 밝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와중에도 한국의 30대 재벌은 33조원의 순익을 거뒀고, 2009년에는 46조원, 2010년에는 79조원의 순익을 거뒀다.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며 더욱 크게 성장한 것이다. 올해도 3분기 현재 현대 자동차가 지난해보다 7.5% 많은 차를 판매하는 등 지난해 이상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재벌들은 세계 경제위기가 격화돼 신용경색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상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4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의 재벌들이 경제위기에 강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재벌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경제를 한국의 국민경제가 동원되어 떠받치는 형국이다. 1998년 IMF 위기 때 재벌들의 부채를 모두 정부가 떠안아 줬고, 2008년 경제위기 때는 수출 확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과 법인세 감면, 재벌기업 제품을 세금으로 사 주는 소비보조까지 지원했다. 세금으로 재벌의 공간을 채워 준 것이다. 재벌들이 1% 돈을 덜 벌면, 위기라고 호들갑을 떨며 2% 더 지원해 주는 정부 경제정책으로 위기 때면 재벌들은 오히려 흥이 난다.

이런 가시적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재벌 대기업들은 더욱 가혹하게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하고, 비용을 들먹이며 해외생산을 확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며 재벌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재벌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하청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약간의 가격교섭력을 갖춘 1차 하청은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영세해 실패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2·3차 하청 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이 1차 하청에 1원의 단가를 낮추면, 납품가를 2원 이상 낮춰야 한다. 안산-창원 등의 공단에 밀집해 있는 영세 부품사들은 재벌들

이 창사 이래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지난해에 오히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이 줄었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제조업기업들의 생산품은 결국 재벌 대기업을 통해 최종 소비재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재벌 대기업을 비용 절감 정책은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과 연결된다. 30대 재벌 대기업을 매출액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95% 가까이 차지하는데, 재벌 대기업 매출 대부분이 수출이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최종 산출물이라는 점에서 결국 한국 경제의 95%는 이들 30대 재벌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년간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동결 또는 삭감됐는데, 이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비용절감 정책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하청구조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재벌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조금만 낮춰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임금절감 압박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청업체를 비롯한 중소 자본가들 역시 이러한 구조에 강력히 조응한다. 단기압력을 빌미삼아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기업생존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마저 묵살하고 탄압한다. 나아가 유성기업의 사례처럼 재벌대기업과 하청업체가 공조하여 야간 노동을 철폐하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노조파괴 공작으로 대응하는 등, 자본의 이해를 극대화하는 데 발맞추고 있다.

한국에서 각종 세금지원과 국민경제 전체를 수탈한 재벌들은 그 돈으로 해외공장을 확대했다. 2007년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내생산 비중이 각각 65%, 82%였지만 지난해 이는 48%와 66%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LCD 패널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생산 비중이 절반을 넘는 제품이 없다. 세

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삼성전자 TV는 국내생산 비중이 3%도 되지 않는다. 휴대폰도 25% 이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생산된 재벌 대기업들의 제품은 재벌의 이익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얼마 전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벌들은 최고의 돈잔치를 벌였다. 경제위기 미명 하에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자본은 자체적으로 비용삭감 정책을 펼치며, 위기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했다. 세계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과 지배계급은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노동자민중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탄압하고 자본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은 노동유연화를 심화하여 자본의 이윤 확보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제 조치이고, 한미FTA는 재벌을 비롯한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버랑으로 몰아넣는 조치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은 자본과 지배계급의 경제위기 비용 전가 시도에 맞서, 자본의 살 길을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복지국가, 야권연대의 수렁에 빠진 노동자민중운동의 혼란

한편 노동자민중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이해를 위한 경제정책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에 맞선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패배주의나 실리주의를 핑계 삼아 반 MB-반한나라당을 기준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선거연합 노선이 민중운동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민주노총도 노조법 전면개정이

나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었지만 투쟁계획 대신에 야5당 공조를 추진하는 식이다.

이런 와중에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대안 모델인 마냥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전후 자본주의 호황기에 강력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권의 위협이라는 조건 속에서 가능했던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의 대불황 국면이다. 과거의 복지국가가 불가능해지자 최근에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자들이 말하는 복지의 핵심에는 노동유연화가 있다.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더욱 썩 임금으로 손쉽게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말하는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또한 복지국가론은 자본의 지배, 자본주의 문제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대중들의 구체적인 불만과 요구를 복지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둠으로써 고용, 교육, 의료, 주거, 양육, 노후 등 각각의 문제들이 갖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을 은폐하며, 국가재정 확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한다. 한국 교육의 학벌주의, 경쟁주의는 반값등록금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상의료로도 대형병원, 제약 자본, 보험자본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복지국가론자들은 마치 비용문제만 해결하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자본주의의 계급관계를 바꿀 생각,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론은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 2012년 정권 교체’라는 야권연대의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개혁이든 상관말고 한나라당만 빼고 복지국가 정치동맹을 하자는 것이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은 노동자계급을 투쟁의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지지세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즉 민주당 중심의 자유주의 정치기획에 노동자계급을 동원하는 것이다.

복지는 현재 계급역관계와 경제위기라는 객관적인 조건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허황된 집권전략인 복지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사회구조적 문제해결과 운동주체의 형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운동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현장조직화를 기반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혁신·강화하자!

노동자민중운동의 이러한 혼란은 2012년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으로 2012년은 세계자본주의의 장기불황이라는 조건에서 향후 한국사회의 전망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 격돌의 장이며, 2013년 이후 계급투쟁의 기본 구도가 형성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기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 민중운동의 주체역량을 고려할 때, 반MB연합 구도가 강력히 관철되면서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의 갈등이 확대되고 운동세력이 지리멸렬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현재 정세는 향후 변혁적 대중운동을 재건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유실하지 않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요구한다. 대중운동의 패배주의·실리주의를 배경으로 한 진보정당운동의 급격한 우경화, 그로 인한 노동자민중운동 전반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체계적 경향을 최대한 저지하면서 향후 사회변혁적 운동의 재개를 위한 계급적 운동의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정체성을 사수하기 위한 계급적 현장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재벌을 중심으로 한 친자본,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이 현장에서부터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야권연대에 의존한 상층 중심의 활동을 넘어 현장투쟁, 현장조합원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투쟁의 구축이 절박한 상황이다. 현장의 민주노조 시수를 위한 산별노조,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기반으로 현장동력을 형성하면서 현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제도적 요구를 전면화해야 한다. 노동악법 전면 재개정을 필두로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과 단결 확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및 간접고용 확대(파견법 개악)에 맞선 투쟁, 정액임금 인상 요구를 통한 정규직 임투와 최저임금 투쟁의 결합을 통한 투쟁, 금속의 공단조직화, 공공의 대학청소미화조직화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조직화, 이주노동자 조직화 등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의 강화 등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때문에 긴축정책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도 세계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긴축과 노동에 대한 비용전가와 노동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목표로 한다. ①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②등록금 폐지 및 정부 지원 확대, 교육공공성 강화에 복무한다. ③최저임금문제 해결 등 빈곤 철폐를 위한 실천투쟁에 복무한다. ④노동악법폐기,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시수를 위한 현장투쟁에 적극 연대한다. ⑤자본주의 경제위기 상황 하의 반자본·반신자유주의투쟁 확대강화, 변혁운동진영 강화,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선전선동활동을 펼치고 투쟁한다. 이를 위한 산별노조별, 지역별로 현장 활동가들의 조직적인 실천과 광범한 연대를 조직하는 데 함께 하자!



간접고용 첼페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첼페

자본과 정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휴식도 거의 없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비정규직에는 간접고용, 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 등이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 또는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에는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으며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다. 일용직 노동자는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워킹서비스 기사, 건설 중장비 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임

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다. 이밖에 사용자가 고용 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한 계약직 노동자도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혹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훨씬 적어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00만 명의 노동자 중 이미 90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이 비율은 더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다수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짐에 따라 사회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은커녕 사장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겠다고 하며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통해 불법파견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사내하도급을 명문화하고 불법파견을 분리해 오히려 자유로운 사내하청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사내하청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상용형 파견'(상용형은 파견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다가 원청 요청 시 파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파견을 활성화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표준계약서 제정 확대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은 불법적인 차별과 제도를 합법화하여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자본의 편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재능학습지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수많은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과 변혁을 위해 싸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전체의 문제이자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다. 비정규직 철폐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부와 자본이 법마저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하고 탄압하는 현시대, 노동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조리한 처우와 자본의 이익을 위한 비정규노동체제를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쟁을 통해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인 시대, 정규직 노동자도 언제 비정규직이 될지 모르며 언제 정리해고 될지 모른다. 세상의 절대다수인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가 하나 되어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면 자본과 정부도 노동자를 자신들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며 비정규직 철폐와 더불어 전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고 철폐

정리해고는 경영의 목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은 제27조 2항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기업이 정리해고를 시행하려 할 경우 그 사유가 법조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폭넓게 정리해고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자본이 필요로 할 경우 정리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경영악화는 자본가의 책임이다. 하지만 정리해고는 경영을 잘못된 사용자의 책임과 무능력함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경영에서 배제된 채 열심히 일만한 노동자가 경영 악화의 책임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정리해고제이다.

최근의 정리해고는 경제위기와 경영악화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경영이 악화되지 않고 이윤을 남기고 있음에도 단기의 더 많은 이윤 확대를 위해 상시적으로 정리해고를 이용한다. 심지어 고의로 경영을 악화

시키기도 한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해 선박을 수주하지 않는 등 공장 경영을 악화시켜 한진중공업 노동자를 정리하고 하였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음에도 167억의 배당이익을 경영진이 나눠가지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른바 ‘먹고 튀는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이윤만 남기고 투자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경영악화를 도모해 정리해고를 시행하기도 한다. 쌍용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한 상하이 자동차는 기술만 유출하고 투자를 하지 않은 채 경영을 악화시킨 후 쌍용자동차를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정리해고 되었다. 심지어 쌍용자동차 사측은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장부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프랑스 자본인 발레오공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발레오 공조 코리아는 5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한국 내에 안정적인 납품관계를 형성한 후 위장폐업을 하고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이렇듯 최근의 정리해고는 자본의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정리해고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통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자본의 편에서 정리해고를 돕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정리해고는 잔인하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경우, 2009년 정리해고 이후 해고자 18명이 생활고와 기타의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정리해고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준다.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재취업의 기회가 적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해고자는 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힘들다. 결국 정리해고는 자본가에게 이익에 따라 노동자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합법적 살인면허'를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정리해고가 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자가 부당한 해고와 처우에 저항하면 자본은 저항하는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해고 한다. 결국 정리해고는 노동조합 탄압, 낮은 임금을 '합리화'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이렇듯 정리해고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자본주의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제 32조 1항은 노동의 권리와 고용의 증진, 적정 임금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리해고는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고 상시적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저임금을 강요한다. 정리해고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다. 1%도 안 되는 극소수 자본의 탐욕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거나 자본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정리해고 철폐는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세상으로 향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정당한 다수의 힘으로 행복한 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정리해고를 철폐해야 한다.



노동악법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자 투쟁을 옥죄는 노동악법

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노동악법과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개별 자본과의 대립과 투쟁은 법제도의 문제로 확장되며, 자본의 이해에 기초한 노동악법은 노동자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다. 법의 변화는 힘 관계에서 좌우되며, 특히 노동관계법은 국회에서가 아니라 노자간의 힘 관계에서 정해지고, 투쟁을 통해 법이 무력화 된다. 대표적 예가 바로 ‘제3자 개입’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고 불법으로 투쟁한다.”는 것은 노동악법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다. 하지만 운동이 정체되고 있을 때 노동악법은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조합원이나 노조 간부가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지요?”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악법에 의한 현장투쟁력의 후퇴, 현장투쟁력 후퇴로 인한 악법의 파괴력 확대가 확장됨을 말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전임자 임금 금지

노동약법은 무수히 많지만 특히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것을 꼽자면 전임자 임금 금지와 교섭창구단일화다. 우선 전임자 임금 금지를 보자. 이 약법의 목표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제한함을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이외에는 없다. 더구나 한국의 노동부는 자의적 해석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통상적 편의제공을 자체를 금지하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임자 임금 문제는 분명 투쟁을 통한 성과임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 투쟁을 통해 극복하자

교섭창구단일화는 자본과 정권의 선전과 같이 복수노조를 보장하는 제도 아니다. 오히려 악법 이전에 조직형태가 다르던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조에게 인정되었던 교섭권, 파업권을 부정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복수노조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용자는 창구가 통일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 악법의 요지다. 이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노동3권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업장내 조합원 조직대비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고, 나머지 노조에게는 교섭을 가질 수 없게 한 것은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복수노조를 인정한다는 미명 하에 개정된 악법은 오히려 복수노조를 제한하고, 노동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뿐이다. 악법은 배타적 교섭권을 얻기 위한 조합원 늘리기, 빼오기, 노조 전임자 배분 등 갈등과 대립 뿐 아니라, 교섭의 실리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경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이는 현실에서 과반수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교섭을 사용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투쟁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악법

노동악법에 주목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며, 노동기본권의 침해는 생존에 대한 침해이다. 그렇다면 노동기본권은 무엇인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3권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교사와 공무원, 기간산업의 노동자는 이미 법적으로 제한 받는다. 또한 쟁의행위에 이르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은 기업이윤에 의해 부정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아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은 고용안정, 안전한 작업, 평등한 인격적 대우, 생활하기에 적절한 임금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작업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자기통제는 궁극적인 노동기본권이다. 이렇듯 노동기본권은 한국 사회에서 극히 제한되어 설정되어 있고, 이조차 제대로 실현되어 있지 못하다.

노동악법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자본과 정권은 노동악법, 공권력뿐만 아니라 사설폭력까지 동원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

듯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악법과 자본의 탄압은 현장에서부터의 투쟁을 통해 분쇄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개별 사업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투쟁의 전선으로 나아갈 때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중의 교육권 쟁취

등록금 폐지! 민중의 손으로 교육권 쟁취!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런데 한국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경쟁교육 속에서 시들어가고, 대학생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다가 죽어가는 나라다. 대학은 등록금으로 사립재단의 배를 불리고 있고, 기업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더 이상 ‘대학’은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기계를 양산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등록금을 폐지하라!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비슷한 경제규모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높다.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민간 부문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총 투자의 약 20.7%(28위)만이 공공부문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실제 한국의 등록금 의존율은 국립대는 39.9%, 사립대는 65.2%에 이르고, 미국은 주립대가 16.8%, 사립대가 26%이다.

지난 6월 반값 등록금 운동의 결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9월 8일 대학 등록금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7천5백억 원을 들여 소득3분위까지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학 스스로가 7천5백억 원만큼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면, 정부가 7천5백억 원을 매칭해서 소득7분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3분위까지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평점 'B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7천5백억 원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7천5백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면 그에 대응해 국고 7천5백억 원을 대학에 지원해 학생들이 추가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7천5백억 원은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일정부분 장학금을 지원 받는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의 자구 노력 결과에 따라 등록금 감면 여부가 결정 나게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식의 등록금문제 해결이 아니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폐지하고, 사립재단이 등록금으로 배분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립대 법인화 중단하라!

국립대를 법인화한다는 것은 대학의 소유구조를 전환하여 이전보다 손

쉽게 대학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며, 국립대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괄적인 국립대 법인화가 지난 10여 년 동안 반대에 부딪혀오자 국립대의 가장 정점에서 있는 서울대부터 법인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를 막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국립대가 법인화된다면 그나마 규제되었던 국립대 등록금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지역 교육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지방 국립대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다. 또한 이전보다 노골적으로 대학이 돈벌이에 나서고, 취업이 어려운 학과를 구조조정 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구조조정은 이미 수년전부터 대학가에 불어 닥친 바람이었다. 이번 반값등록금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부실대학구조조정을 마치 대안인양 제시하였으나, 취업률이나 신입생 충원률을 중심으로 한 대학평가를 통해서 지방대학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학의 수도권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기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과는 점점 도태된다.

이미 대학이 취업양성소가 된 상황에서 취업이 안 되는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이 왜 나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을 양성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청년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본을 위한 학문만 키우고 전체 인류와 사회를 위한 학문을 등외시한다면, 그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대학을 통제하자!

대학에서 생산하는 지식이 자본의 입맛에 맞게 채워지고 있다, 이는 자

본주의 사회에서 말 잘 듣는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함이다. 또한 노동자 내의 불평등을 당연하게 만든다. 결국 대학교육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하기에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알아야 할 지식을 대학이 가르칠 것을 노동자 민중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반빈곤 연대

99% 민중의 이름으로 반빈곤연대운동을!

1 대 99의 사회, 지속되는 저항

지난 2008년 미국의 거대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금융자본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그 부담을 임금삭감, 복지축소, 민영화 확대를 통해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해 왔다. 그 결과로, 경제위기는 해결되기는커녕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유럽은 국가재정위기에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물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며,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빈곤율은 15%를 넘어 전후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다.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빈곤층, 실업자, 노동자의 저항도 거세게 일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의 청년들의 사회적 불만 폭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이어지고 있는 금융자본의 책임을 묻는 광장집거행동, 그리스 노동자들의 공공부문과 복지축소에 항의하는 파업투쟁 등 고통에 처한 노동자, 실업자, 청년, 민중의 저항행동은 북아프리카, 아랍 중동에서의 민중의 저항에 이은 혁명과 더불어 앞으로 요동칠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삶의 폐허에 세워지는 재벌과 투기세력의 부활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은 경제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왔다’고 자화자찬하지만 한국경제의 화려함과 빛은 소수 재벌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삼성, 현대를 비롯한 재벌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자본은 올해에만도 20조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감세로 인한 직접적 혜택으로 기업과 소수 부자가 얻은 이익만 해도 수십조에 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노동자민중, 특히 빈민의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다. 물가폭등, 전세값 폭탄,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이른바 ‘트리플 폭탄’이 민중의 삶 속에서 터지고 있다. 정치권이 퍼뜨리는 복지담론은 확산되지만, 노동자, 빈민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대책은 나아지지 않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고통은 덜어지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였다.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라는 명목으로 3만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

고, 14만 여 명이 수급혜택이 감소하였으며, 수급탈락을 비관한 수급자의 자살도 있었다. 강제이주 당한 포이동에서는 화재에 따른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주택마저 철거하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에서는 정리해고를 철폐하라는 크레인농성이 300일 가까이 지속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지만 자본은 전혀 끄떡 않고 있다. 뉴타운개발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의 죽음도 줄을 잇고 있다. 사상 최대라고 이명박 정부가 떠벌이는 2012년 복지예산은 복지담론의 성찬과 비교했을 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사회의 빈곤의 양상과 정책 현황

임금 하락과 고용불안정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은 오히려 나빠졌다. 2010년 실업률은 3.7%로 추산되는데, 2008년 3.2%, 2009년 3.9%에 이어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률은 58.8%, 경제활동참가율은 61%이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6.5%로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취직 자체가 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취업준비생이 대폭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대폭 하락 추세이다. 한국의 실업률 통계 계산 과정에 구직 활동을 포기한 노동자들이나, 주부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18시간 미만 취업자, 잠재실업자 층을 포함할 경우 실업률이 12.5%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근로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3.3%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49.8%에 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임금은 2008년 50.3에서 2010년 46.9로 하락했다.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소득분배구조 악화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 8.68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1인가구를 포함했을 때의 수치이며, 이 때 당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85만 5,000원, 상위 20%의 소득은 742만 5,000원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절대빈곤인구 및 독거노인세대가 대거 포함된 1인가구를 제외하고 소득 5분위배율을 따지면 훨씬 격차가 줄어든다. 1인가구를 제외하였을 때의 소득 5분위배율은 2008년 5.71을 기록하였고, 2010년 5.66으로 소폭 완화되었으나, 이는 한시적 고용대책 및 지원대책의 효과이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고소득층의 자산감소효과의 일시적 효과이다. 그런데 이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기 전의 소득격차는 훨씬 커진다. 복지정책이 작용하기 전 단계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지난해 7.74로 전년보다 늘었다. 최근 10년 사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최고의 악화 속도를 보인다. 2010년 10월 OECD가 26개 회원국의 9분위 소득배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미국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8년 0.314에서 2010년 0.310으로 소폭 하락한 것도 일

시적인 복지지원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저소득노동자 비율도 증가 추세다. 도시 가구 상대빈곤율은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0년 14.9%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장소득만을 비교해보면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로 전체 국민 6명 중 한 명은 빈곤한 상태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도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 현황

[표 1] 2012년 최저생계비 결정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현금급여 (원/월)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한국에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생계비 기준선인 동시에, 빈곤기준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3년에 한번 계측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전몰량방식을 택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 최저임금 역시 노-사-공익위원 합의 방식으로 매년 결정되지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재계와 정부의 편에서 있으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합의방식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인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노동자평균임금의 30% 수준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

[표 2] 2012년 최저임금 결정금액 (단위 : 원)

시급 : 4,580	월급 : 957,220 (주 40시간 기준)
------------	--------------------------

2000년 이후 고용의 불안정성, 임금 격차 분배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도입한 정책(비정규보호법)이나 기존의 제도들(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지책으로서의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문제의 경우, 비정규보호법안의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호출근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거나,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자본은 비정규직보호법 등을 계기로 기존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경우도 법정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수는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 왔다.

최저생계비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빈곤의 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각종 임금보조 및 소득보장, 그리고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로 중요한 문제다. 고소득자와 중간소득자의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는 것은 고소득자들로 부가 집중되는 식으로 분배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임금 격차의 확대 뿐 아니라 비임금, 특히 주식투자, 각종 사보험 등 금융적 수단을 통한 확보되는 소득의 규모와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민중, 빈민들의 임금과 소득, 생존에까지도 금융화된 세계경제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불안정노동과 실업 반복

불안정한 일자리와 실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소위 '회전문'처럼 단기적인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다. 비정규직의 형태는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같은 공장의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사내 하청이라는 형태로 2차 3차 하청 형태의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된 수출산업을 담당했던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이미 이러한 고용형태가 일반화되었다.

영세자영업자의 몰락, 노점상 확대

한국은 고용된 노동자 숫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숫자는 대폭 늘었다. 이 중 가장 빈곤한 상황에 처한 것이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점상운동조직의 추계에 따르면 전국의 노점상 숫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노점상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용역(깁패)에 의한 단속과 탄압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노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신규 노점상을 억제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철거민 대거 양산

2009년 1월 20일,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중단하라고 망루를 쌓아 농성을 벌인 철거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이루어져 철거민 5명이 사망하고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다.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은 이명박 정부가 경찰력으로 민중들을 억압한 데 있었지만 근본적인 배경은 서민을 빈곤층으로 내모는 무분별한 개발 정책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발전의 논리로 건설산업과 부동산을 부양한다며 투기성 개발사업을 밀어붙여 왔다. ‘뉴타운 개발’이라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서울 300여 곳을 개발지구로 지정해 세입자를 몰아내고 전세가격 상승 대란을 부추겨 왔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재벌 건설사의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대규모 특혜를 받아 진행되며, 재벌 건설사들은 용역개발기업을 통해 강제철거를 동반한 폭력적인 개발사업의 속도를 붙여왔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공공주택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며, 현재의 개발사업에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원주민들은 철거민으로 전락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철거민의 신세로 전락한다.

노숙인 홈리스에 대한 지원대책 부재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몰락한 자영업자들과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대거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집 값 상승으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아졌다. 노숙인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지만, 저임금 단시간 노동으로 안정적인 생계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홈리스행동 등 홈리스 운동 단체들은 홈리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 운동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시원, 쪽방 등의 열악한 임시주거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포함한 홈리스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반빈곤운동의 과제

“노동권과 민중복지,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반빈곤운동 핵심 요구

-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난한 이들의 삶에서 출발하는 복지 확충!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모두의 주거·생존권을!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
- 노동권은 생존권이다!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 노점관리대책 철회! 노점단속 중단!

세부 요구

- ▶ 용산참사 재발하는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1. 뉴타운 실패 선언! 뉴타운/재개발 정책 전면 수정하고, 순환식 개발 전면 확대하라
 2. 용역폭력 근절, 강제퇴거 금지의 원칙을 수립하라
 3. 개발지역 세입자, 재정착 대책 마련하라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5.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하라
 6. 안정적 점유보장 제도 마련하라
 7. 포이동 재건마을, 서초동 산청마을 화재복구 지원하고, 비닐하우스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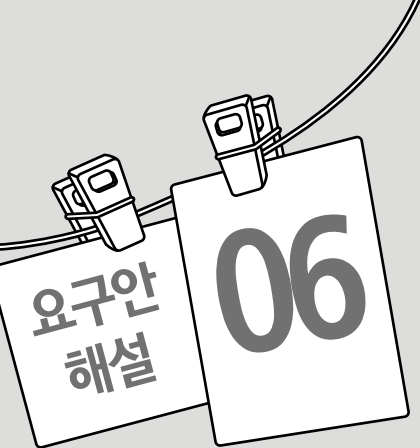
주거 지원책 마련하라

- ▶ 단속 위주의 노점상대책 철회하고, 노점생존권 보장하라
 1. 디자인 서울, 노점시범거리 등 전시행정사업 추진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 중단하라
 2. 용역폭력 근절하고 노점상 인권을 보장하라
 3. 노점상 몰아내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4. 노점말살정책인 노점관리대책 즉각 철회하라

- ▶ 사회복지/사회서비스 확충하고 빈곤층 복지지원 확대하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 확대
 3. 긴급복지지원 확대하고 홈리스, 철거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마련하라
 4. 의료공공성 확충하고 의료급여 확대하여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하라
 5.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강화하라

-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하고, 실질적/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하라
 1. 서울시 주요 공공역사 중심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
 2. 서울시 홈리스 지원 조례 제정, '노숙'을 범죄화하는 단속정책 폐기

3. 서울시 여성 홈리스 지원대책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실천
4. 홈리스 일자리 대책 강화
5.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화, 쪽방 재개발 중단 및 지역 재생 계획 수립
6.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7. 홈리스 생활자에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대책 마련



한미FTA 저지

날치기 의지가 확고한 이명박과 말로만 반대하는 한미FTA 원조당

이명박 정권은 끝내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할 작정이다. 10월31일 오후부터 줄기차게 외통위 처리를 시도하고, 11월3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날 G20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빈손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비준안이 외통위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때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갈팡질팡이다. 처음에는 '10+2 재재협상'을 주장했다가, 다른 독소조항들은 몽땅 눈감아주고, 투자자-국가제소(ISD)만 빼주면 비준동의 해주겠다는 타협안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틀 만에 한나라당과 야밤(10월 31일 새벽)에 만나 포기해버렸다. 한미FTA를 여야합의로 비준체결하고 난 뒤에, ISD에 한해서 미국과 추가 협의하자는 말도 안 되

는 안이다. FTA가 체결된 이후에 미국정부가 추가 협의를 해줄 리 없다. 설사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ISD는 정식재협상과 의회결의가 필요한 FTA본문 조항이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수정권한이 없다. 결국 그때 가서 이러저러한 법적 절차와 미국 측의 거부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끝나고 말 것이 뻔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한미FTA 원조당인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리라 믿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들의 포기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고 교활하다는 데 분노할 따름이다. 적당히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물러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물밀협상을 하면서 이쪽저쪽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결국 민주당은 분노한 민중운동의 진이 빠지고 날치기가 통과되고 나서야, 다시 정색을 하고 한나라당을 맹렬 규탄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힘 있는 대중투쟁만이 한미FTA를 막을 수 있다!

결국 믿을 것은 힘 있는 대중투쟁이다. 한나라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치 못하도록 몰아세우는 길뿐이다.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대중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다. 국회의사 일정의 절차적인 문제는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마음에 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한미FTA를 포기할 의사도, 전면 재협상할 능력도 없다. 그들은 11월 3일에 통과시키려 발악할 것이고, 안 된다면 10일, 17일, 24일, 줄줄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똑같은 시도를 할 것이다. 국회의사일정이나 몇몇 기술적인 협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끈기 있고 즐기게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여가야 한다.

한미FTA가 날치기될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한미FTA 투쟁은 국회비준 절차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미FTA는 양국 간의 무역이익을 조정하는 단순한 무역 관세협정이 아니다. 한미FTA는 세계 경제위기에 내몰린 초민족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협정이자, 그들의 입맛대로 한국사회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종합 정책이다. 미국 자본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재벌 또한 민족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국익’이 아니라 ‘계급’이 본질인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싸움은 한국 재벌을 포함한 초민족적 자본과 노동자 민중이 남한사회의 전반적 재편을 두고 맞붙는 계급투쟁이 그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 통과 된다고 해서, 결코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미FTA를 발판으로 더 큰 동아시아-환태평양 FTA 전략을 추진 할 것이고, 한국의 자본과 정권은 그 틀 아래에서 ‘자본의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이념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준안 통과는 최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제 재편이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비준안 통과 이후에 곳곳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안 저지 투쟁은 그렇게 각개격과 당하기 전에, 함께 뭉쳐 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한미FTA의 온갖 독소조항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이후 우리의 삶과 투쟁은 그만큼 더 고단해질 뿐이다. 지금 이대로 저들을 막지 못한다면, 가까운 내일에 우리는 이렇게 물으며 살아갈지 모른다. “한미FTA가 날치기될 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반자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

지금 노동자 정치운동은 위기다. 96-97 총파업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독자적인 정치운동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2000년 민주노동당 건설과 활동, 2007년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분당, 최근 본격화된 진보대통합운동의 과정을 거쳐 온 노동자 정치운동의 실상은 참혹하다. 노동자 정치운동의 역사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고 노동자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운동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퇴행-실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좌초한 진보대통합운동, 노동자정치의 우경화를 보여줄 뿐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진보대통합운동'이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 진보대통합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올바른 대안인양 급부상했다. 그러나 9.4 진보신당 당대회 부결과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결로 당 대 당 통합을 통한 진보'대'통합운동은 결국 좌초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진보대통합의 좌초 그 자체가 아니라, 진보대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정치의 실종과 퇴행이다.

진보대통합운동의 논리는 진보진영이 총결집해 하나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실상은 '묻지마 통합'이자, 노동자정치의 심화되는 우경화였다. 우선, 통합진보 정당 건설운동은 민주노동당 시절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이 전혀 없었다. 의회주의, 노동자투쟁에 대한 중재정치, 비계급적인 정책과 활동(비정규약법 수정안 제출, 사회연대전략, 친기업당 발언 등), 조합원을 선거 때 몸 대고 돈 대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동원식 정치에 대한 근본적 평가와 반성이 전혀 없었다.

둘째, 통합진보정당 건설세력들은 민주노동당보다 더욱 우경화·탈계급화된 당을 건설하려 했다. 통합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합의문(5.31합의와 8.28합의)를 보면, 통합진보정당의 목표는 '2011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확보,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로서, 자본가정당인 민주당, 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대와 공동정부 구성을 표방하였다. 이는 통합진보정당이 민주대연합의 쌍생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까지 진보통합정당에 참가시키려 했다. 자본가정당과 하나의 당을 만들겠다는 경악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이라는 민주노동당 강령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참여당 참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사실상 침묵했다.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 참가가 부결되었지만 2/3에 육박하는 숫자가 찬성했다. 국민참여당 참

가에 반대한 세력들 다수는 국민참여당과의 선통합에 반대했을 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현재 노동자정치와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총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정당의 덩치를 키우는게 목표가 된,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의회주의적 정치의 끔찍한 귀결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의 포기 선언, 민주대연합의 대세화

노동자정치의 퇴행은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에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총이 휩쓸려들어가는 것을 통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대거 파괴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지금도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한미FTA 등이 모두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과 같은 자본가정당의 소행이었다. 결국 국민참여당,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정당이 이명박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느새 이들의 계급적 본질과 행태는 잊혀지고, 이명박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자본가정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의 광범한 반MB 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김대중-노무현의 후계자들(민주당, 국민참여당)과의 공공연한 연대가 노동자정치를 대체해 갔다. MB집권 이후 치러진 지자체 선거, 재보궐 선거 등에서 과거 보수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론인 ‘민주대연합’이 노동자정치의 대세로 정착하였다.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방침 → 진보정당의 민주당-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한 민주당-국민참여당 후보로의 단일

화 → 민주노총의 민주당-국민참여당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라는 경악할 만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노동자정치세력들의 활동은 철저히 봉쇄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자본가정당을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시민후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좀 다른가. 신자유주의적 재벌 개혁에 기여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한미 FTA와 해고자 복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박원순 후보가 노동자(진보) 후보일수는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몇 년 전부터 대세화된 야권연대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탈당파인 통합연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한 통합진보정당의 출현 및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이 2012년 노동자정치의 대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 등 자본가정당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한 가운데 공동정부 구성이 노동자의 이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음은 의문의 여지도 없다. 더욱이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의 파탄을 보여줄 뿐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무엇인가. 바로 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넘어, 독자적인 이념과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민주대연합, 나아가 자본가정당과의 합당은 이런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짓밟는 것이자, 노동자정치의 기본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대연합은 올해 이미 드러났듯이, 반MB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2012년 총대선 승리를 위해 자본가정당과 연대에 치중하는 선거

심판론으로 대중의 반MB 투쟁의지를 왜곡하여 수렴시키고 있다. ‘제가 당선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부르주아 정치인들과 똑같은 논리와 행태가 노동자정치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대안: 반자본 노동자 계급정치의 실현!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일치시키려는 탈계급적 정치, 의회 진출과 집권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 계급정치를 왜곡하고 파탄내는 최근의 정치 흐름은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노동자정치의 파산이다. 이제 노동자정치의 이념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노동자 정치의 목표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끝장내고, 노동해방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는 이를 위해 다른 누구도 아닌 노동자 계급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손으로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대중 투쟁의 강화와 발전을 통해 극복하고, 자본가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생산수단과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쟁취하는 것을 지향으로 삼는다. 따라서 두 계급의 정치는 결코 화해하거나 하나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지금은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와 MB를 포함한 전 세계 지배계급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에 대한 공격을 전면화하고 있는 시기다. 현재 노동자민중의 삶을 벼랑 끝에 내모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 나서지 않고는 노동자민중의 삶은 개선될 여지가 없다. 자본주의 위기 심화와 노동자정치의 실종 속에서, 이제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운동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극복-노동해방’이란 목표 아래, MB와 자본에 맞선 공세

적인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화하고, 자본주의 극복 전망 아래 계급정치를 새롭게 복원하고 확산하는 것이 그것이다. 어디서? 바로 현장에서부터 이 흐름을 일궈내야 한다.

2011 노동해방선봉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자협 조합공성 실현!
노동자협 노동자 계급정체 실현!
민자본

투쟁현황 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

투쟁배경: 해군기지 건설의 역사

- 1993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처음 제기된 후, 해군은 2002년 후보지역으로 화순항을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2005년 9월 위미로 후보지를 변경 추진하였다. 역시 위미리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중 2007년 다시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2007년 4월, 인구 1,900명 중 불과 87명이 모인 강정마을 비밀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해군기지 강정마을 유치결정을 발표하였다.



- 그러나 2007년 8월 마을 임시총회에서는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고, 열흘 후인 8월 20일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주민투표에는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였다.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강정마을에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

투쟁현황: 최근 상황

- 지난 8월 24일에 (서귀포시가 이미 불법 공사 시설물이라고 인정한) 기지 건설 장비인 크레인 조립을 막으려던 마을주민들과 활동가 5명을 강제 연행하였고 이중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또 26일에는 충북 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제주청으로 파견하여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지휘-통제를 강화했다.
- 8월 29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경찰청은 강정마을 집회 신고를 원천 불허하였고, 서울경찰병력을 제주도에 추가로 지원했다.
- 9월 1일에는 미리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평화운동가들을 연행했다.
- 9월 2일 새벽 5시경,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었다. 지난 8월 29일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7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이 받아들인 후,

제주도에는 서울경찰병력이 추가 파견되어 약 1,100여명의 경찰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평화문화제 하루 전인 9월 2일 농성자들이 모여 있는 중덕삼거리를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와 안에 있던 주민들을 밖으로 들어냈다. 그 사이에 해군은 마을과 기지 부지를 차단하는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리고 울타리 설치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활동가와 주민 등 35명을 연행하였다.

- 이후 평화비행기는 물론 상시적 마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군은 9월 29일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였으나, 여론을 의식해 아직 본격적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집행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1. 긴장과 대결만을 불러올 해군기지 건설

-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해군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안보 실현'은 허상이고,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제주가 미군의 해상 소통으로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핵심. 광-일본-대만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對중국 견제 라인에 제주를 추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하기 위한 견제기지이자 미국 기동군의 전진기지임. 이는 당연히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부추길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위험을 한 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2. 주민 반대 불구하고 비민주적으로 결정, 강행

-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해안가는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에도 없던 곳.
-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3일전 급하게 강정마을이 대상지로 포함되었고, 여론조사 또한 졸속으로 진행됨.
- 마을 주민 대다수의 반대의사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제주도 측은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 같은 강압적 공사 강행으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는 참담한 수준임.
-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도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또한 제주도의회 또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결의안 취소'를 의결하는 등 해군 측의 공사강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3. 반대여론 강경진압으로 일관

-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해 정부는 시공업체와 함께 지금까지 법적 처벌,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음.
- '중북/좌익' 색깔론을 앞세운 보수언론과 정권의 탄압
- 정부는 주민들의 저항, 제주도의회의 공사 중단 요구, 국회 진상조사단의 전면 백지화 요구 등을 철저히 묵살한 채 색깔론을 앞세워 전면적인 공안 물리로 일관하고 있음.

4. 환경 파괴 우려 외면한 채 졸속 선정해 해군기지 공사 부지

-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임
- 해군은 항만입지, 배후지 여건, 문화재 현황, 어업권 현황 등 매우 부실하고 추상적 항목만으로 입지타당성을 형식적으로 검토, 강정 유치를 밀어붙였고, 제주도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대보전지역'에서 강정을 해제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합법화시켜 주었음.
- 국회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강정에 대한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가 철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정이 해군기지로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요구 및 구호

- 긴장과 대결만을 불러올 제주 해군 건설 기지 반대!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제주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하라!
- 비민주적 의사결정, 제주시를 규탄한다!

전북고속

1. 투쟁배경

- 어용노조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던 전북의 버스노동자들이 2010년 이후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전북의 버스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고 비용 본인부담, 심지어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체불임금에 시달려 왔다.
- 하지만 한국노총 어용노조는 체불임금을 100만원으로 정리하고, 그 대가로 어용조합 간부들의 월 급여를 70만원 인상시켰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주노조가 연쇄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측은 민주노조를 복수노조라며 인정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 2010년 12월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조 인정, 최저임금 지급,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노동시간 단축, 식사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북 버스 7개사의 공동파업이 시작되었다. 사측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용역강패를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2. 투쟁현황

- 이후 시내버스 사업장의 경우 투쟁 끝에 잠정합의하여 2011년 5월 1일자로 현장으로 복귀하였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단체협약

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 교섭조차 나오지 않는 전북고속 자본으로 인해 전북고속 동지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탄압 속에서도 300일 넘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생계투쟁을 진행하면서도 민주노조 지키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 전북고속 동지들은 2011년 10월에 서울상경투쟁, 국정감사투쟁 등을 진행하였으며, 잠정합의 후 복귀하였으나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동자들도 9월초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서 권고사직 처리 이후 해고 통보를 하는 등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3. 문제점

- 사측은 복수노조라 안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민주노조를



인정치 아니하고 교섭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사측, 어용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노동3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조차 무시하고 있으며,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 전북의 버스자본에게 연간 150억 원이 넘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다. 하지만 전북의 모든 버스업체는 적자로 보고된다. 더구나 재정지원의 근거인 운송원가는 제멋대로 부풀려져 있다. 정년이 지난 기사들을 1년 단위로 축락직 및 한시계약직으로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여금, 연차수당 및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운송원가에 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계산된다. 광범위한 비정규직 사용, 일상화된 징계, 사고비용 전가, 재생부품 사용, 유류금액 과다책정 등을 통해서 자본은 절대이윤을 보장받고 있으며, 노동자는 극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4. 요구 및 구호

-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조 인정! 단체협약 체결!
- 최저임금 지급!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노동시간 단축!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도시철도공사분회 현황과 계획

1. 사업장 현황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광역시 최대 지방공기업으로 2004년 4월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고 현재 19개 역을 운영하고 있음.
- 지하철 개통 당시부터 운영경비 절감, 경영전문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들어 역무관리, 역사청소, 사옥관리(청소, 시설관리, 주차안내, 경비), 식당운영 등을 위탁·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우기 시작함. 심지어 초창기 역무관리 직영역마저도 순차적으로 위탁으로 전환.
- 2011년 현재 공사의 정규직은 약 400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00명 이상으로 추정.

2. 광주도시철도공사분회 현황

- 분회명 :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도시철도공사분회
- 가입일 : 2011년 5월 13일 / 분회설치 : 2011년 6월 7일 (지부 2011년 제5차 운영위)
- 지하철 1호선 19개 역중 공사가 직영하는 두 개 역(소태역, 평동역)을 제외한 17개 민간위탁 역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역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대상자 155명 중 130명이 조합가입.
- 승차권 판매·승차권 개표·집표 및 교통카드 보충, 영업수입금 관리 등 제반 영업업무, 역사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역구내 승객 질서유지·안내 및 안전관리, 기타 역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에 종사.

- 역장은 각 역 단위로 2년마다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대부분이 지하철 근무경력 없는 낙하산 인사임.
-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순서로 6일 주기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복리후생이 턱없이 열악함.

3. 임단협 진행경과

- 05/13(금) 각 역에 조합가입 통보
- 06/03(금) 임단협 상견례 및 제1차 교섭 진행 →역장 13명 중 12명 참석.
- 06/08(수) 임단협 제2차 교섭 →역장 전원 불참으로 무산. 집단교섭 거부 답변.
- 06/10(금) 임단협 제3차 교섭 →역장 전원 불참으로 무산. 집단교섭 거부 답변.
- 06/14(화) 임단협 제4차 교섭 →역장 전원 불참으로 무산. 집단교섭 거부 답변.
- 06/15(수) 조정신청
- 06/16(목) 공사 앞 1인시위 돌입
- 06/21(화) 임단협 제5차 교섭 →역장 전원 불참으로 무산.
- 06/24(금) 1차 조정회의
- 06/27(월) 공사 앞 출근선전전으로 전환
- 06/30(목) 임단협 제6차 교섭 →역장 전원 불참으로 무산.
2차 조정회의 → 집단교섭 방식으로 임단협 진행하기로 합의 하고 조정취하.

- 이후 8개 핵심 쟁점사항 남겨두고 10월 26일 제20차 최종교섭이 결렬되어 쟁의 준비 절차에 돌입.

4. 임단협 쟁점사항

쟁점조항	노측안 요약	사측안 요약
전문	(생략)	회사발전, 노사평화 등 문구 삽입 주장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근무시간 중이라도 각종 회의, 행사 등 조합활동에 유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수용불가. 총회시간 일부 보장해줄 수 있으며 그 밖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타임오프 시간에 포함하여 계산.
전임자 등	타임오프 범위 내 최대 유급 전임자(풀타임+파트타임)를 보장하라.	수용불가. 유급 전임자 둘 수 없으며 전임자 두더라도 활동 범위를 노사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제한.
시설편의 (조합사무실)	조합사무실, 사무집기를 제공하라.	수용불가. 원청의 지시로 사무실 제공할 수 없음.
산별노조 교섭보장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우리 노조와 별도 절차없이 자율교섭과 집단교섭을 보장하라.	수용불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사업주 재량으로 교섭방식 정할 것. 이번에 집단교섭을 통해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이후 교섭에 대해서는 자율교섭, 집단교섭 보장할 수 없음.
유급휴일	명절, 4대절, 국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수용불가. 역무원은 6일 주기 근무라 연간 휴일 수가 주5일 근무자보다 많으므로 6일마다 돌아오는 휴무일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음.
유급특별휴가	년 4일의 유급특별휴가를 보장하라.	수용불가.
임금협약	장기근속자 우대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수당 신설 등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해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노조의 임금체계는 수용하나 전체 직원 임금총액은 현재 수준에서 조정. 이에 따라 임금 삭감안을 제시해옴.

5. 투쟁의 의의와 목표

- 공사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해온 광주도시철도공사 운영기조에 대한 최초의 심판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간접고용 철폐 투쟁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한다.
- 위력적인 대원청 투쟁을 전개하여 조합원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제고하고, ‘생활임금 보장! 단체협약 쟁취!’ 2011년 임단투 완전 승리를 이뤄낸다.
- 이번 투쟁을 발판삼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조직화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6. 주요일정

- 10/26(수) 임단협 제20차 교섭 : 교섭결렬 선언
- 10/27(목) 쟁의조정 신청
- 11/01(화)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회 소집 공고
- 11/03(목)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1차 면담 추진 => 면담 거부시 7일부터 공사앞 출근선전전 돌입
- 11/08(화)~11/11(금) 조합원총회 : 쟁의행위 찬반투표
- 11/11(금) 조정종료일
- 이후 파업투쟁을 포함한 집중투쟁 전개

광주 시내버스 현장 상황과 '광주 시내버스 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상황

1. 광주 시내버스 현장 상황

- 10개 사업장의 대형버스 운전하는 정규직 2천여명과 중형버스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3백여명이 조직 대상임.
- 정규직은 2교대제이며 1주일은 오전, 1주일은 오후 근무하는 형태. 비정규직은 격일제로 일하며 새벽 첫차부터 밤늦은 막차까지 운전하는 상황.
- 비정규직의 경우 1년씩 계약연장 하는 방식. 비정규직에 있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어도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10개사업장 중 가장 큰 사업장은 대창운수 사업장으로 버스 300여대, 기존 어용노조 조합원 600여명 규모임. 나머지 사업장은 100-150여명 규모임.
- 7월 복수노조 합법화 시점에 6월말 한국노총 어용노조가 '호봉제도입'을 골자로 한 2년치 임금협상을 타결함.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가 임금협정 만료기간(2013년 1월까지임)에 맞춰 늦어지게 됨. 우선은 노조활동 보장과 급여공제 등 기본협약 체결부터 요구해야 하는 상황임.

2. 시내버스 현장 내 민주파 진영의 상황

- 그동안 '시내버스노동연대'가 6개 사업장에 회원을 두고 어용노조 내에서 노조 민주화(노민추) 활동을 벌여옴.
- 시내버스 조합장 선거에 버스노동연대 후보가 결선투표까지 올라가는 등 선전하였으나 작년 하반기 각 단사 선거에서는 저조한 득표율을 보임.
- 복수노조 합법화 시행 이후 8월에 버스노동연대는 해산하고 '광주 시내버스 민주노조 추진위'로 전환. 10월부터 민주노조 설립을 위해 집회와 선전전 등 투쟁중인 상황.
- 현재 10개 사업장 중에 천일버스와 세영운수 2개 사업장은 공공운수노조 분회가 조직됨. 조합원수는 아직 미약하며 탈퇴와 가입이 반복되는 상황.
- 아직까지 사측과 어용세력들의 탄압은 미약하나 이후 징계와 배차 불이익 등 탄압이 예상됨.

3. 시내버스 유인물 내용

- 버스준공영제!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인가?
 연간 수천억에 이르는 배이상 늘어난 버리지원금, 국민의 혈세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비정규직, 촉탁직이 몇 배로 늘어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쉬프트제로 인한 인력감축, 특히면 남발하는 무차별 징계탄압, 현장은 하루하루 삭막해져 갑니다.

- 우리는 그들을 왜 어용노조라 하는가?

그나마 있었던 권익을 다 팔아먹은 집단 누구인가?

청춘 바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그나마 누진제로 지급되던 것을 (10년 근속에 15년치 지급) 가차없이 팔아먹은 어용노조! 노동조합이 나서서 쟁취해야 할 법적 통상임금을 외면해 현장 조합원들이 힘겹게 승소했더니 결국 노조지도부가 팔아먹은 어용노조! 버스현장에 비정규직, 촉탁직이 십수년전만 해도 들어올 수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비정규직, 촉탁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어용노조! 준공영제라는 미명하에 하루하루 더 고달퍼지는 노동현실을 외면하는 집단 누구인가? 임금 몇 푼 올랐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생활 기본생계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노동강도는 한없이 강화되는데도 대책없는 어용노조! '쉬프트제' 등으로 인력은 감축되고 부족한 인력을 정신없는 뺑뺑이로 채워 버스사업주 배만 불리는 잘못된 준공영제에도 무대책인 어용노조! 배차시간은 용변볼 틈도 없이 나날이 더 촉박해져가고, 사고율은 증가하고, 징계가 남발하고, 자부담이 횡행해도 무대책인 어용노조! 오직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눈먼 집단 누구인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지역노조위원장)마저 간선제로 치리 독재의 아성을 쌓아가고, 단체교섭의 진행마저 조합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밀실에서 야합하는 어용노조! 조합원들의 권익은 나날이 황폐해져가고 어용노조 조합장들의 특혜는 커져만 가는 어이없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용노조라 칭한다!

-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민주노조 건설합시다!

2011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은 “기존 어용노조 탈퇴! 민주노조 가입!”이 모두 자유롭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민주노조! 건설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조 가입을 이유로 현장탄압이 있는 경우 민주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응해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 민주노조로 와서모여 뭉치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약칭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기업단위 조직이 아닌 지역조직이 중심체계입니다. ‘단사의 벽’을 허물어 민주노조 세력화를 통한 위력적 투쟁으로 전국 버스현장에 민주노조 깃발을 세워 가치있는 노동! 생활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쟁취! 한 길에 함께합시다!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가입상담안내

어용노조 철폐! 민주노조 쟁취! 산별노조 건설! 인간다운 삶 쟁취!

우리가 몸담은 버스현장을 “신명나는 일터, 착취와 탄압없는 해방일터!”로 건설합시다! 해방일터를 만들기 위해 동지여! 함께 어깨걸고 강건한 민주노조 건설합시다! 2011년 7월 1일 전면적 복수노조 실시 시행으로 과반수 노조여야 교섭권이 확보됩니다. 동지들께서 고민하는 모든 것을 의논하고 도와드립니다.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

배경 및 경과

인간답게 살기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금인상도 요구하고, 노동자로서의 당당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대우조선 1만7천 사내하청노동자와 1만2천 자회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대우조선 자본은 이를 방치하지 않았고 예외 없이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대우조선 자본은 비정규노동자 탄압의 전형인 원청의 직접개입에 의한 핵심사업장 위장폐업으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 외 3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전원을 2개 업체에 분산 고용승계 시키고 이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회원 색출작업 등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 이에 강병재 동지가 고공농성에 돌입하였고 이를 계기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우조선해양 현장 노동자 조직인 '현장중심의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현민투)'는 사업장 내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 등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에 나서자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당위가 아닌 구체적 실천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천투쟁을 진행하였고 지난 2011년 6월 2일 88일만에 강병재가 동지가 송진담에서 내려왔다.

현상황

현민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사내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비정규직 1만인선언 등의 활동을 힘차게 진행했고, 이후 1차 선언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행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는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계기로 지역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마산, 창원, 통영, 거제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경남지역 비정규직조직화 선전전도 진행되고 통영, 안정공단의 성동조선과 거제, 신한 내 공단의 삼성중공업2공장, 임천공업을 중심으로 조직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점 및 요구

지역의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사고, 노동안전, 저임금, 불안정노동, 장시간노동, 이주노동자의 차별 등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투쟁에 나서면서 비정규 문제는 전체 노동자 모두가 주체로 나설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견제와 감시도 만만치 않다. 대우조선 자본은 상황을 주시하며 해고와 징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며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체 노동자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한다면 자본의 탄압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의 길이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연대의 주체는 모든 노동자다!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쟁취하자!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한진중공업 투쟁

1. 투쟁배경

- 한진중공업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가 매년 이어져왔다. 교섭 시 임금동결, 단협개약, 노조활동 축소를 요구하고 정리해고를 예고하며 희망퇴직을 받고 일정정도의 희망퇴직 인원이 확보되면 정리해고 중단합의를 하



는 방식이었다.

- 이러한 과정 속에 이미 2500명의 하청노동자의 해고와 650명에 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당했으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인력감축 등이 끊임없이 강요되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자본은 2010년 또 다시 생산직 170여명의 정리해고 등 400여명의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 이에 2010년 12월 20일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1년 1월 6일 새벽,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 하지만 이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지도부는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투쟁을 정리하였으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와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숙 동지를 중심으로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이어가게 된다.

2. 투쟁현황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에 대한 연대의 움직임이 희망버스로 현실화 되었고, 이는 수만명의 연대대오와 함께 5차까지 진행되면서 정리해고 철폐에 대한 전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강화되고 있다.
- 하지만 한진중공업 자본은 여전히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는 김진숙 동지를 중심으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로 걸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선거에서 한진중공

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의 동지가 지부장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3. 문제점

- 한진중공업 자본은 선박 수주가 없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170억 원의 주식배당과 사내이사의 연봉인상이 이루어졌으며, 파업이 끝나고 6척을 수주했다. 자본은 정리해고를 진행시키며 노동자의 생존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윤만을 도모하고 있다.
- 이전에 비정규직 포함 3000여명이 잘렸고, 300여명이 강제휴직을 당했고, 울산공장이 폐쇄되었다. 그리고 다시 270여명을 다시 희망퇴직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170여명을 정리해고 통보하였다. 이는 계속되는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 해고는 살인이며,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자본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정리해고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리해고제 자체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요구 및 구호

- 정리해고 철회! 정리해고제 철폐!

풍산마이크로텍 투쟁

(주)피에스엠씨 상황: 6일 77명 정리해고 신고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정리해고 시키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주)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는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월 6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노동자 77명을 '정리'한다는 신고를 했고, 77명은 한 달 뒤인 11월 7일 정리해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위로금 3개월치 임금을 준다는 '희망퇴직공고'도 했다.

피에스엠씨(PSMC) 전체 노동자수는 2백 50여 명이며 지회 조합원수는 186명이다. 지회는 지난 8월 23일 회사와 △진행중인 정리해고 즉시 철회 △조합원 고소 건을 8,24부로 철회 △8,26까지 모든 현안(영업이익 달성, 2010년, 2011년 임단협)을 마무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교섭과정에서 '기본급 15%삭감, 상여금 200%삭감, 년차 전부 소진, 순환휴직 20-30%'를 실시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통분담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회는 50% 순환휴직과 상여금 지급시기를 2012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8월 31일 교섭이 결렬됐다. 그 뒤 회사는 9월 2일 정리해고 실시 공문을 지회에 보냈다. 지회는 이번 주부터 지회간부 철야농성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집회와 농성을 하며 '결사항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해 12월 29일 풍산그룹은 풍산마이크로텍(리드프레임 생산)을 제 3자에게 기습 매각했다. 그 뒤 회사는 올 6월부터 “유상증자를 해야 되므로 임금 25%를 삭감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풍산마이크로텍지회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지난 7월 22일 지회파업 및 지부간부 등을 동원해 ‘악질자본 투기자본 PSMC 규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키로 통보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한 노사협의를 7월 26일 개최하자”는 공문을 지회로 보냈다.

풍산그룹과 PSMC의 회사 밀거래와 지회의 투쟁경과

올 3월 풍산마이크로텍은 주주총회에서 회사이름을 (주)피에스엠씨(PSMC)로 바꾸고 3월 22일 교섭에서 지회의 주요요구사항인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 승계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받아들일 것이며, 지회의 경영참가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4월 들어 회사는 태도를 바꾸어 ‘유상증자’를 거론하면서 교섭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지회는 부분파업을 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회사는 6월부터 “3년째 적자인데, 내년도도 적자면 상장이 폐지되어 회사가 망한다. 임금삭감해서 흑자를 만들고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살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 지회장은 7월 22일 집회 투쟁사에서 “회사적자와 채무규모도 파악안하고 회사를 인수해놓고 투자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흑자를 만들고 유상증자를 하려는 자본은 처음봤다”며 회사의 경영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문지회장은 “7%의 지

분을 가진 자가 회사경영권을 장악하고 27%에 이르는 주식은 소유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분명히 어떤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경영진은 물러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풍산그룹은 지난해 12월 29일 지회와 협의도 없이 풍산마이크로텍 주식지분 57.2%를 2백 40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인수자는 (주)하이디스였다. 그 뒤 고용불안과 퇴직금 정산 등 위기를 느낀 비조합원들이 대거 금속노조에 가입해 조합원이 23명에서 186명이 되었다. 지회는 이때부터 △고용승계 △노조와 단체협약 승계 △70억 원에 이르는 퇴직금 중간정산 확보 등을 요구해왔다. 지회에 따르면 2010년 12월 29일 풍산마이크로텍을 풍산그룹으로부터 인수한 (주)하이디스는 PSMC 대표이사로 선임된 정 도 씨에게 돈을 빌렸고 (주)하이디스가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인수한 주식지분을 정 씨에게 양도했다.

풍산마이크로텍은 1991년 풍산금속 동래공장 생산부에서 풍산정밀로 분사, 2000년 풍산마이크로텍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다. 이 회사는 1985년 리드프레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비철금속 중 동(銅) 사업 주력그룹인 풍산그룹 일원으로 그룹의 반도체 부품산업을 맡아왔다. 그러던중 2010년 12월 마지막주에 회사는 생산물량이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연월차 휴가를 쓰도록 해놓고 회사를 팔아 치웠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

1. 투쟁배경

-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졌으며, 대법원까지 손들어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성에, 수많은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 그리고 2010년 11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라는 요구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 파업을 진행하며, 진짜 사장 정몽구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에 관한 교섭을 전제로 농성을 해제했다.
- 하지만 점거투쟁이 끝나고 불법 파견에 관한 교섭을 한다는 현대자동차는 농성을 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기압류, 법적 책임, 징계 등을 내리기에 바빴다.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법원에 항소만



계속하였다.

- 이에 항의하며 2011년 2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과 조합원 두 명이 종로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에서 농성을 진행했으며, 그리고 조합원 두 명은 양재동 현대 기아차 본사 옆 30m 광고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 2011년 2월 10일에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 심(고등법원)이 확정되었으나, 현대차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대법원 항고와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2. 투쟁현황

-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해고자를 비롯한 징계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투쟁과 출근 투쟁, 투쟁을 알리기 위한 선전전 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징계를 계속 확대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하여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현재 공장점거 파업투쟁 이후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며, 다시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3. 문제점

-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의 문제는 한국의 전체 조립라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와 바로 맞물려 있으며,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징계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해고자를 비롯한 징계자들은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막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징계를 계속 확대해 가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4. 요구 및 구호

- 불법파견 정규직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징계 철회! 해고자 복직!

경북 경산 경상병원투쟁 경과

배경 및 경과

- **2010년 2월 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 **2010년 5월 17일**: MOU 체결
 - 다수의 인수의향서 접수되었고 우선협상자 선정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참석
 - 우선협상자 선정평가의 핵심사안이 고용보장의 수준이었음

- 백승찬 이사장이 전직원 고용보장을 제시해 타 병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MOU 체결
- **2010년 5월 27일**: 출근투쟁 시작
- **2010년 7월 중순**: 본계약 체결
 - 매각주관사, 인수자, 노조와의 삼자합의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인수절차 진행
 - 파산직전 근무자 중 고용청약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 고용보장한다는 ‘고용보장합의서’를 부산법원과 인수자간에 인수조건으로 체결함
 -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하고 투쟁을 유보함
- **2010년 7월 중순**: 본계약 체결 직후 인수기획단과 노조 면담, 주1회 교섭 구두약속
 - 본계약 체결(7월 중순) 직후 경상병원인수단이 경상병원 방문하여 조합측과 주1회 교섭 약속하였으나, 이후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음
- **2010년 9월 중순**: 교섭 약속 이행 촉구, 조속한 개원
 - 교섭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두달 가까이 백승찬 이사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무시당하여 울산에 내려감
 - 하지만 고소고발(폭력, 명예훼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노조탄압
- **2010년 10월**: 고용청약서 인수기획단에 전달
 - 전체 고용청약서 제출자 184명(병원측 주장) 중 64명이 노동조합을 통해 제출, 이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를 주장함
- **2010년 10월**: 병원로비 농성 철수
- **2010년 11월**: 컨테이너 농성 돌입

- 노조사무실 철수 요구로 기존 노조사무실 철수하고 병원 앞 인도에 컨테이너 설치
- **2011년 1월 30일**: 용역깡패 동원 집회신고 대행 시작
 - 매일 밤 12시 용역과 제비뽑기로 집회신고
- **2011년 2월 15일**: 직원출근 및 개원준비 시작/개원준비단 항의방문
- **2011년 2월 18일**: 고용보장약속 이행 촉구 시민 서명용지 전달 항의 방문
- **2011년 3월 1일**: 202명상 신고 개원
 - 132명 직원 채용했으나 그 중 고용보장 대상자는 60여명 밖에 안됨
 - 특히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단 한명도 고용보장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았으며 영상의학과는 전체 10여명 중 1명만 고용보장대상자를 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규채용, 진단검사의학과는 7명 중 2명만 고용보장대상자이고 나머지 5명은 신규채용한 상황
 - 이를 비추어보면 고용보장합의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이 명백함
- **2011년 5월 17일**: 경산삼성병원 업무방해 가처분에 대한 결정문 떨어 짐
 - 병원측 의도와는 달리 현재 농성중인 컨테이너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회, 시위등도 계속 허용됨
- **대구대 산학 협약 파기**
 - 5/18 예정됐던 대구대와의 산학협약체결이 파기되면서 경산지역에서 이미지 실추
- **2011년 6월 9일**: 미디어충청을 통해 경산삼성병원 노동조합 탄압 문건 공개

- 용역강패를 고용하여 수역원의 돈을 쓴 것 드러남
- 노조원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 강간, 성매매, 교통사고 유발, 방화’ 등 반인륜적인 방법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남
- **2011년 6월 20일**: 용역강패 철수
- **2011년 7월**: 도로법위반 경찰 고발(김현주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 경찰조사)
- **2011년 7월**: 병원측 2차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10월말~11월초 결정문 나옴)
- **2011년 8월 30일**: 대책위 경산삼성병원 이용거부 선언
 - 그동안 중재적 입장을 취하던 대책위 입장 변경
- **2011년 9월 1일**: 병원내 경산삼성문화센터 운영시작
 - 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셔틀버스 운행. 병원이 경쟁병원보다 일반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병원의 셔틀버스 운영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대안으로 짜낸 방안
 - 노조 병원행정관할 기관인 경상북도에 경산삼성문화센터 운영 의료법위반 사실 문제제기
- **2011년 9월 11일**: 경상북도 보건국 실사 나와서 불법 인정, 시정명령
 - 현재 정문 약국 2층에 삼성문화센터 이전 운영 준비 중
- **2011년 9월 5일**: 428명상으로 증설 허가 받음
 - 약속한 455명상에 22명상이 모자란 상태이나 개원당시 보다 고용보장 대상자가 고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음.(구 경산병원 직원 중 조기 퇴사한 사람 중에 일부 채용은 확인한바 있음)

현상황

- 병원 인수 후 단 한차례의 대화에도 임하지 않고 있음. 현재 9명의 동지들이 투쟁 중

문제점 및 요구

- **주요구호** : 2010년 7월 구 경상병원 인수 당시 부산지방법원과 합의한 고용보장합의서 이행하라!

유성기업 투쟁

1. 투쟁배경

- 2009년 주간연속 2교대,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사측은 10여 차례 교섭에서 사측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후 용역강패를 공장에 배치하고 공격적 직장폐쇄 실시하였다.
- 2011년 5월 18일 지회 및 조합원들은 사측이 배치한 용역강패를 몰아낸 후 공장을 거점으로 농성투쟁 시작하였으나, 공장 점거 만 5일 만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전 조합원 및 연대대오 연행하였다.

- 이후 대오를 정비한 유성 동지들은 비닐하우스 농성을 전개하며, 선전전 및 집회투쟁 등을 진행하면서 연대의 확산이 가져왔다. 하지만 사측과 현장복귀가 합의됨에 따라 주간연속 2교대 투쟁, 징계문제 등은 이후로 과제로 남기고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2. 투쟁현황

- 복귀 이후 사측은 복귀 조합원에 대한 전환배치, 일방적인 교육, 출입금지 등의 탄압을 자행했으며, 이에 대해 현장의 조합원들은 투쟁으로 강력히 맞서고 있으나, 사측은 11월말까지 1차 106명, 2차 102명, 3차 130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이며, 40명에 가까운 징계해고를 통해 전면적 탄압을



기도하고 있다.

- 동시에 용역강제 재배치하고, 정문을 봉쇄하고 징계자들의 회사출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유성 동지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어용노조와 임금인상 개별교섭을 시작하였고, 징계자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들먹이며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사측의 노동탄압과 노골적인 민주노조 파괴 기도에 맞서 유성 동지들은 1인 시위, 출근투쟁, 집회 등을 통해 다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3. 문제점

- 주간연속 2교대와 월급제는 애초에 도입되기로 되었던 것이다. 사측은 야간노동 철폐 투쟁의 진진을 가로막고, 오히려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강제를 동원한 폭력만행을 통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였다.
- 이는 유성기업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사주와 정부의 비호, CJ 씨큐리티와 같은 노조파괴 전문가들이 동원된 등 현장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자본의 전 방위적 공세이다.
- 복귀 이후 사측은 오히려 징계와 해고, 어용노조 등의 탄압을 통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노동탄압을 더욱 강도 높게 자행하고 있다. 이는 이후 동일한 양태의 자본의 공세를 반복시킬 것이다.
- 주간연속 2교대와 월급제 쟁취, 야간노동 철폐는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요구이다. 사측은 이를 공격적 직장폐쇄와 징계, 해고 등으로 탄압하고 있다.

4. 요구 및 구호

-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즉각 철회와 현장복귀!
- 폭력사태 주범, 합의사항 불이행, 노사관계 파국으로 끌고 가는 유성 경
영진 퇴진!
- 민주노조 사수, 현장권력 쟁취, 주간 연속 2교대 쟁취!

쌍용자동차 투쟁

배경 및 경과

2009년 4월 쌍용자동차 사측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먹튀 자본의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생존을 지키고 권리를 찾기 위해 정리해고 반대와 파업을 진행하였다. 경찰은 온갖 수단의 폭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였지만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77일간 파업을 이어갔다. 이후 8월 6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합의를 하였다. 정리해고자 974명 가운데 640여명을 무급



휴직-전직-희망퇴직 등으로 처리하고 1년 뒤 복귀시킨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사측은 2009년 8월 6일 합의 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

그 사이 쌍용자동차는 먹튀 자본 상하이 자본에서 인도의 마힌드라 자본으로 매각되었다. 마힌드라 자본 역시 먹튀 자본 상하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판매 실적이 상승했음에도 해고자 복직은커녕 관련된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마힌드라 자본은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하이 자본과 마찬가지로 기술 유출과 회계조작 등의 음모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그사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 17명이 생활고와 질병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 또 다른 노동자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해고는 살인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결의대회, 선전전,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자 복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점 및 요구

쌍용자동차의 마힌드라 자본은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상하이 자본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또다시 정리해고와 기술유출, 회계조작 등이 벌어질지 모른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노조는 즉각적인 해고자 복직과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이다. 쌍용자동차

노조만의 힘으론 부족하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정리해고의 문제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자본의 살인을 내버려 둘 순 없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시그네틱스

투쟁배경

-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PCB를 생산하는 회사로 영풍그룹 계열사다. 영풍그룹은 2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 중 II업종 계열사는 시그네틱스, 영풍전자, 인터플렉스, 코리아씨키트, 테라닉스 5개이며, 이 회사의 매출은 1조2천 억 원에 영업이익이 2천억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5개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6천 명(많게는 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의 생산직 노동자 중 직접고용 노동자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수천억의 영업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사내하도급(소사장제)을 통한 노동자들의 불안정고용, 여기서 나오는 이익인 것이다.
- 2000년대 초반 시그네틱스와 영풍전자를 시작으로 영풍그룹 내 동일업종 사업장에 대한 사내하청계열화(소사장제로의 전환)가 본격화되었다. 2001년 염창동공장 폐쇄와 안산공장으로의 이전은 영풍그룹이 노동자

취직 고용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아주 노골적인 시도였으며, 시그네틱스 분회는 악랄한 자본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공장점거 등 영웅적인 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화해와 항의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7년간의 해고투쟁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고 복직하였지만 3년 만에 두 번째 해고를 당했다. 한 회사에서 두 번째 당하는 집단 해고상황이다.

투쟁현황

- 노조설립 : 1967년 9월 8일이며, 금속노조 가입은 01년 8월 7일.
- 조합원 : 총 61명(복직자 32명+해고자 29명)
- 01년부터 공장이전 문제로 파업(7월 파업 당시, 140여명 파업 참여)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투쟁을 유지하고 있음.
- 파업참여 조합원 전원 해고 이후 03년 8월 파업 불참 조합원(80여명)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기업별 노조에 가입.
- 이후 회사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04년부터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07년 대법 부당해고 판결이후 일부 조합원 복직.
- 10년 신규 소사장회사로 전직 강요.
- 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직과 퇴사를 거부한 조합원들에 대해 회사 외 장소에서 6개월 넘게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 기간 회사는 소사장제를 도입해 생산시설 가동했음.

- 11년 6월 13일 32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 통보(11년 7월 14일부로 해고)

문제점

회사의 일방적인 전환배치: 소사장제로의 전환

- 서울소재의 회사가 이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안산으로의 발령은 회사의 일방적인 배치였다. 그리고는 안산을 영업양도(소사장제로 전환)하면서 안산공장의 운영은 분리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안산은, 공장만 떨어져 있을 뿐 모든 계획과 관리는 파주본사에서 지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산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32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시그네틱스에는 생산직에 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파주공장에는 현재 800여명의 노동자들이 10~15개 가량의 소사장 밑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 중에 있다.

정리해고의 진짜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규직 없는 생산 공장을 만들기 위함!

- 경영상에 의한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 시그네틱스 경영상황은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11월 코스닥상장으로 인하여 600억 이상의 시세차익과 수백억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2010년 영업이익이 196억, 2011년 반기영업이익이 140억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4월에는 파주공장에 1,000명 규모의 생

산시설을 증축하였으며 8월8일자 디지털타임즈 김정일 대표이사 인터뷰기사에 의하면 현재 파주공장은 직원 800여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작업할 정도로 생산력이 극대화 되어 있고 생산시설확대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진행된 정리해고가 아니라 영풍그룹차원에서 정규직 없는 생산 공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진 정리해고 이다. 영풍그룹은 고용 의무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표적 기업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벌써 99년도부터 10여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력의 제공은 영풍그룹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고 이익은 영풍기업에 귀속되고 있으나 고용은 소사장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시그네틱스의 정리해고는 이러한 사내하도급 확산을 위한 영풍그룹의 경영전략에 의한 불법적인 정리해고이다.

투쟁과제

- 시그네틱스는 정리해고 철회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 사내하청계열화를 통해 비정규직(고용불안) 확산하는 시그네틱스/영풍그룹을 규탄한다!
- 노동조합 탄압하는 시그네틱스/영풍그룹을 규탄한다!

장안 외국인산업단지 외국투자자본:

파카한일유압/포레시아/한국3M

1. 파카한일유압

투쟁배경

- 미국계 기업으로 굴삭기 유압밸브를 생산하며 시화공단에 위치해있다. 매출액 400억 원 규모의 직원 200여명이 일하던 중소기업이다. 파카한일유압은 09년 5월 세계경제위기를 빌미로 32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했고, 이후 수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전 직원의 절반가량인 100여명을 감원했다. 그러나 실제로 파카한일유압이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기도 특혜를 제공하고 있던 장안으로 시화공장의 기술과 물량을 빼돌려 시화공장과 똑같은 복제공장을 운영(09년 4월 MBC PD수첩 보도). 결국 시화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해고시키고, 장안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같은 제품을 생산하며 경기도의 특혜지원을 받고 있다. 억울하게 정리해고를 당한 32명의 노동자들은 09년 7월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보다는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탄압에 혈안이다.
- 외투기업 파카자본이 노동조합을 극히 혐오한 나머지, 회사 이전 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자 수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다른 계열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장을 짓고 기존 공장의 기술과 영업망 등을 탈취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위장함과 동시에 기존 공장의 노동자들은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량 정리하고 한 것이다.

투쟁상황

- 2005년 6월 28일 미국의 다국적 기업 '파카'자본이 '한일유압'을 인수함.
→ 파카한일유압으로 상호 변경.
- 2005년 6월 경기도와 파카는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금의리에 총 50백만 불에 대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 2006년 3월 21일 금속노조 경기금속지역지회 파카한일유압분회 설립
- 2008년 10월 6일 08임단협 교섭기간 중 회사측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단행
- 2008년 11월 12일 직장폐쇄 철회,
- 2008년 11월 21일 임단협 체결. (조인식)
- 2008년 11월 말 현장복귀 직후 주야간 2교대 근무체계를 주간으로 전환. 잔업 없어짐.
- 2008년 12월 12일부터 20일간 일방적으로 휴업 강행 (개별적 휴업동의서 작성)
- 2009년 3월 12일 정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일방통보 (3월 25일 한겨레 신문 내용 참조)
- 2009년 3월 26일 분회의 장안공장 견학 시 파카한일유압의 생산품 전체가 파카코리아 장안공장에서 똑같이 복제되고 있음 발견
- 2009년 4월 7일 MBC PD수첩에 파카한일유압 정리해고문제 방영. 회사

는 여론악화를 의식해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시점을 4월 30일로 연기하고 정리하고 인원을 41명으로 축소할 것을 통보함.

- 2009년 5월 31일 현장 조합원 34명 일방해고
- 2010년 8월 단협해지 통고이후 2011년 2월초 단협해지.
- 2010년 12월 조합간부에 대해 쟁의행위에 참가했기 때문에 잔업, 특근을 시킬 수 없다며 업무차별을 자행함. (현재까지)
- 2011년 7월 복수노조(기업별 노조)설립 후 기존부터 교섭을 진행하던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와 교섭을 거부하고 기업노조가 과반수 노조 및 교섭대표노조라며 기업노조와 교섭을 진행함.

2. 포레시아

투쟁배경

- 포레시아는 프랑스 자본으로 전 세계 190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별 기술력을 인정받아 각 자동차 부품별로 세계 1,2위를 다투는 굴지의 기업임
- 포레시아는 2003년 자동차부품 제조사이면 국내기업인 '창흥정밀'의 자동차 배기계의 사업만을 인수 매각하여 2003년 5월1일부로 '포레시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음
- 매각당시 조합원 85명이 고용승계를 받아 2003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지회'를 설립하게 됨

- 2008년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던 사업장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위치한 '장안외국인전용투자단지'로 이전.
- 2009년 당시 회사의 운영은 대표이사 1인이 양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무 관리직들은 일부 업무통합으로 양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현재 2010년 3월 회사의 일방적인 법인통합으로 '포레시아 배기시스템코리아(주)'를 '포레시아배기컨트롤 시스템 코리아(주)'로 흡수통합시킴
- 노동조합은 법인이 통합된 이후로 '민주노총금속노조 포레시아배기컨트롤 시스템코리아지회'와 '한국노총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복수노조로 이루어져 있음

투쟁현황

- 2008년 12월 울산공장 폐쇄 함
-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측의 일방적인 희망퇴직 공고로 조합원 34명이 퇴사함
- 2009년 5월26일 조합원 21명 정리해고 단행함
- 2009년 7월26일 조합원을 감금시키고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함
- 2009년 11월20일 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한 고소고발 2명의 재판진행 (진행중)
- 2009년 11월24일 새벽 5시30분경 용역강패를 투입시켜 조합사무실에 침탈하여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냄
- 2009년 12월18일 현장조합원 36명 금속노조 탈퇴함

- 2009년 12월31일 사측의 단협해지 일방통보
- 2010년 1월15일 사측구사대 조합사무실침탈 및 폐쇄함
- 2010년 3월 법인흡수통합
- 2010년 4월 희망퇴직자 8명 재입사(희망퇴직자 우선채용)
- 2010년 8월 ~ 10월 생산직사원 신규채용 공고
- 2010년 9월말 일방적인 단협해지 실효통보
- 2010년 9월말 ~ 11월초 한국노총조합원(반장,조장)이 금속노조조합원에게 금속노조조끼를 벗으라고 협박,폭행,폭언,갈취등을 일삼고 심지어 조끼 등벼보를 찢고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는등의 만행을 저지름(노동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회사가 개입했을 거라고 추정함)
- 2010년 11월1일 현장조합원 1명 금속노조 탈퇴함
- 2010년 11월1일 희망퇴직자 1명 재입사(희망퇴직자 우선채용)
- 2010년 지회 보충교섭 진행중(주1회)

3. 한국3M

투쟁배경

나주와 화성공장에 09년 5월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미국자본인 3M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기보다는 노조탄압 전 문가를 영입해 대량징계, 강제 전환배치, 감시 카메라 설치, 고소고발 등 온갖 탄압을 자행. 용역경비를 투입해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하고 손배가

압류와 무차별적인 노조탄압에 의한 구속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현재 3M지회는 120회가 넘는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며,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장 철수, 구조조정 하겠다는 악랄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외투사업장 공동투쟁과 무기한 상경투쟁 등 민주노조를 시수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현황

- 2009년 5월 한국쓰리엠지회(나주, 화성 포괄) 설립
- 2009년 8월. 기초교섭, 2009년 임금협약 및 특별협약 체결
- 2009년 9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 2009년 11월 전남노동위원회 조정완료, 2010년 11월 현재 100여 차례 교섭 진행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함.
- 2010년 임금 교섭은 지난 6월 17일 시작해 8월 1일 전남노동위원회 조정 완료
- 2010년 7월 20일 조합이 단협, 임금, 현안문제에 대해 최종양보안을 제시했으나 회사가 수용 거부. 8월 12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돌입.
- 2010년 9월 6일~11일 서울 여의도 본사 22층 간부 농성을 통해 노사 임원진 간담회 개최, 한달동안 집중교섭 진행키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농성을 해제함.
- 2010년 9월 14일 노사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 및 징계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고 20분도 안 되어 간담회 파행으로 끝남. 9월 28일부터 집중교섭을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진척은 되지 않고 있음.

- 집중교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월 29일부터 징계위를 개최해 박근서 지회장을 해고함. 이후 노조 간부 56명에 대한 추가 징계.

4. 동서공업지회/주연테크지회

동서공업지회 주요경과

- 2008. 8. 26 : 사측 직장폐쇄 단행
- 2008. 9. 08 : 사측 직장폐쇄 철회
- 2008. 10. 15 : 08년 임 단협 교섭 잠정합의
- 2008. 10. 22 : 잠정합의안 찬 반 투표 진행 (83.7% 가결)
- 2008. 12. 26 : 노동부 정리해고 인원 51명 접수
- 2009. 01. 05 : 사측 일방적 희망퇴직 공고 부착(단체협약 위반)
- 2009. 01. 13 : 미사용 연월차 강제사용 서명요구
- 2009. 02. 02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 및 희망퇴직 4차 공고 부착
- 2009. 02. 26 : 15명 해고 예고장 발송
- 2009. 03. 05 : 사측 일방적 배치전환 강행 (단체협약 위반, 개별적 동의서 작성)
- 2009. 03. 31 : 15명 해고
- 2009. 04. 01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2009. 07. 23 : 해고 민사소송 제기

- 2010. 02. 22 : 회사측 인력충원 해고자 2명, 희망퇴직자 1명 경력직 신규 채용 방식으로 복직
- 2010. 05. 13 : 해고 무효소송 승소
- 지회 금속노조 탈퇴총회(부결됨)
- 2011. 9 : 박종기 집행부 당선
- 지회임원선거 전지도부(박종기지도부) 당선됨.
- 이춘호 전 지회장 등 고법 벌금형 선고 이후검찰 대법 상고 함.

주연테크지회 주요경과

- 2010년 입단협 도중 8월13일부로 지회장, 부지회장 징계 해고
- 2010년 교섭 중단. 단협 미체결 상태로 2011년 7월 타임오프 관련 내용만 정리
- 컴퓨터 조립 시 중고부품 사용 건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 조달청, 감사원,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사실을 알렸지만 내용 자체를 조사하지 않음. 이에 2011년 1월경 주연테크 송시몬회장은 사기죄로 조달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
- 회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맞서며 안양지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안양지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의 모든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림. 지회에서는 안양지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1인시위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항소 함.
- 서부지검에 고소 고발한 내용을 마포경찰서에서 조사. 2011년 8월30일부로 송시몬의 사기죄에 기소 함. 그러나 서부지검은 소극적인 행위

였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기각함.

- 지회장, 부지회장 해고 건은 2011년 4월 경 행정에서 승소했지만 복직
만은 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함. 2011년 9월7일 행정고법 선고가 남아 있
음.

- 중고부품 사용 건은 여전히 현장에서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생산을 진
행하고 있지만 가치분 판결로 인해 모든 행위가 막혀 있음. 송시문 회
장/주연테크 회사 관계자들도 경찰조사에서 중고부품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소극적 행위이고,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조항
이 없다고 함. 다른 PC업체들은 중고부품을 사용할시 이러한 내용을 소
비자들에게 알리고 기존의 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함. 그러나 주연테크는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새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내부고발 이후 주춤하던 행위
가 가치분 판결이후 또다시 버젓이 중고부품으로 조립된 PC가 판매되
고 있음. 또한 조달청을 통해서 여전히 정부기관으로 납품이 되고 있음.

- 업무방해금지 가치분 판결은 실제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판결로서 당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과 이미 현장에
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었던 사실조차도 선전전, 영상, 온라인 게시 및 그
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조차도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
는 판결을 내렸음.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며, 70년대 유신헌법이 되살아난 판결임.

문제점

- 국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단물만 먹고 튀는 외국자본!

장안 외국인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자본들은 해외첨단기술 유치
 는커녕 국내기업 단물만 먹고 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외국
 자본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계획이 없을뿐더러, 사측과 함께 노조를 탄
 압하기 바쁘다.

요구 및 구호

- 회사는 멀쩡한데, 노동자 대량해고 웬말이냐!
- 정리하고 철회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 노동자 해고 일삼는 외국투기자본 필요 없다.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각
 성하라!

삼화고속 파업 투쟁

1. 배경

- 10여년 동안 한국노총 어용노조가 회사측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탄압 해옴. 임금의 경우 시급 인상 대신 수당 등 기타 부분 삭감을 통해 10년 간 동결의 효과를 누려왔고, 근로시간의 경우 짧은 배차시간, 하루 21시간과 야간노동을 강제함. 불합리한 처사에 저항할 경우 징계, 사고 처리비 자비 부담, 원거리 발령 등을 통해 탄압을 지속해옴.

2. 경과

- 2011. 3. 1 민주노조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나대진 위원장 당선
- 2011. 5. 18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전환 결의
- 2011. 4. 14~ 6. 17까지 10차례 교섭 요구
- 2011. 6. 25 ~ 6.26(2일간) 1차(전면파업)
- 2011 7. 7 ~ 7.10(3일간 2차(전면파업), 기본합의서 작성 후 현장복귀
- 2011. 7.19 ~ 8.12(25일간) 3차(심야파업), 선결조건합의서 작성 후 정상 조업 복귀
- 2011. 10. 4~10.9(6일간) 4차(심야파업)
- 2011.10.10 ~ 무기한 전면파업

3. 상황

사측상황

- 사측이 삼화고속지회 탈퇴 조합원 늘고 있다는 문자발송 등 조합원 회유
작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사측은 총파업 직후 인천시 건설교통과에 찾아가 적자 광역버스 4개 노
선 사업권을 반납하며 유희인력을 늘이는 등 노조 압박.

인천시 등 관련 기관

- 민주노총인천본부가 노동특보를 통해 요구사항 전달한 이후 인천시의
반응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삼화고속 사측으로 책임을 넘기며, 단기간
에 이렇다 할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
- 총파업 직후인 10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현행 70%대의 삼화고속
광역버스 의존비율을 장기적으로 30%까지 낮출 것이라고 발표하고, 적
자 광역버스 4개 노선 사업권 반납 및 폐지를 건설교통국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등 암묵적인 사측 편들기의 태도를 보임.



여론

- 언론보도, 온라인상에서의 시민여론 등 전반적으로 여론은 좋은 상황
- '68억원 적자'를 기조로 하는 사측의 논리에 대해 반박작업 진행(임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광역노선 적자를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사돈을 회장 일가의 사재처럼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분석 및 폭로)

파업대오

- 철야농성에 전체 파업대오가 결합하지는 않고 있으나, 낮 일정을 중심으로는 일정수준의 대오가 유지되고 있으며, 극소수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라도 파업프로그램 결합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사측의 회유작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파업 미참여자들을 최대한 조직하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기획(조합원 투쟁속보 발행, 개별 방문, 조합원 단결의 밤 등)을 집중해 나가기로 함.
- 10월 18일 현재 600명 직원 중 450여명 민주노총 조합원 조직

4. 요구

勞 측	使 측
- 시급 20.6% (973원) 인상 (4,727원⇒5,700원) - 근무시간 감축 (21시간⇒18시간) - 기 지급하던 각종수당 그대로 지급 (총파업 후 10월 17일 첫 교섭에서 노조는 시급만을 교섭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한 상황)	- 시급 3.5%(165원)인상 (4,727원⇒4,892원) - 근무시간 감축 (21시간⇒18시간) - 각종수당 조정지급 ※ 공항철도, KTX, 파업 등으로 경영수지 악화 ('11.8월말 광역버스 68억 적자)

재능교육지부 투쟁

거리농성 1500일, 이제는 끝내야 한다!

1. 투쟁배경

- 2007년 12월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 지부는 마이너스 월별정산제도, 자동충당제도 등 단체협약 개악에 맞서 해고협박 철회와 임금제도 개선이라는 요구로 본사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은 사측과 경찰의 탄압에 부딪혔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본사 앞 천막농성은 10차례가 넘게 침탈당했으며, 사측은 용역강패를 동원하여 절도 및 폭행도 비일비재했다.
- 재능교육 사측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1월, 사측은 노동조합과 맺었던 단체 협약을 폐지하고 전임자 2명을 해고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정치권력과, 학습지교사의 무권리를 통해 부를 축적해온 자본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철저히 짓밟았다.
- 단체협약 일방해지, 조합원 전원해고, 통장 급여 가압류, 조합원 살림살이 압류, 20억 손해배상청구, 급여 100% 압류, 용역강패동원 성희롱-폭행-테러 등이 재능교육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벌여온 일이다.

2. 투쟁현황

- 지난 8월 천막이 철거된 이후 24시간 경찰의 감시와 비와 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농성 중이다. 얼마 전, 중구청과 경찰에서는 환구단 앞마당에서의 집회와 농성을 막기 위해, 환구단 문 앞에 철재담장까지 설치했다. 재능교육 자본-구청-경찰-서울시까지 동원되어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농성 조차 공권력을 이용해 막아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 거리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1400일을 넘었다. 이제 재능교육지부와 '재능교육OUT!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연대단위들은 농성투쟁 1500일을 맞기 전에, 100일 집중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3. 문제점

-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초의 노동조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유일한 단체협약을 지키는 투쟁이다. 10년을 넘게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외쳐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무시되고 있다.
- 재능교육은 현장의 선생님들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제도들로 현장의 선생님들은 한 달 꼬박 일하고도 “56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회원의 사정으로 밀린 회비와 그만둔 회원의 회비를 선생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 재능교육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용역깡패의 폭력, 고소고발, 가압류, 해고 등을 동원하여 재능 노동자들에게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4. 요구 및 구호

- 단체협약 원상회복!
- 해고자 전원복직!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현대차 아산 금양물류 성희롱사건 해결을 위한 상경투쟁

1. 투쟁배경

- 금양물류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이며, 성희롱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14년 동안 차를 검사하는 일을 해 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이다.
- 금양물류의 현장소장과 조장은 그녀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그녀가 이 사실을 공론화하자 협박과 폭언을 가했다.

- 공론화 이후 금양물류는 그녀에게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대며 그녀에게 정직 6개월과 보직 변경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 이후 피해자는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사건을 제보한 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투쟁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금양물류는 피해자를 징계하고 시켰다.
- 피해자는 1인 시위, 집회, 농성 등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 ‘성폭력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가해자와 금양물류, 현대자동차는 폭행, 농성장 침탈로 일관하고 있다. 금양물류를 폐업시키고, 형진기업을 만들었으며, 피해자는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2. 투쟁현황

- 2011년 5월 23일, 피해자와 현대차 아산조합원들이 상경해 서초서 앞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투쟁을 알리고 사회화시키기 위해 여성가족부 앞으로 농성장을 이동하였다.
- 하지만 여성가족부 역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일말의 움직임도 없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여성가족부 앞 농성장을 용역을 사주하여 침탈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투쟁이 PD수첩을 비롯한 공중파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연대의 흐름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3. 문제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은 비정규직의 고통과 더불어 여성이기 때문에 격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잘 보여준다. 성희롱 자체도 문제이며, 성희롱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금양물류와 현대자동차의 태도는 더욱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다. 피해자는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으며, 가해자는 징계위원이 되어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였다.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회사에 찍히면 언제든 쫓리수 있다'는 불법과건이라는 계약근로관계 자체의 폭력이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과견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가 생기면 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더 큰 문제는 폐업이라는 이름으로 업체 사장을 바꾸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고 손을 터는 것이다.
- 명백한 성희롱 사건이며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맞음이 확인되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1인시위하고 농성하며 투쟁하는 것조차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또한 이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역시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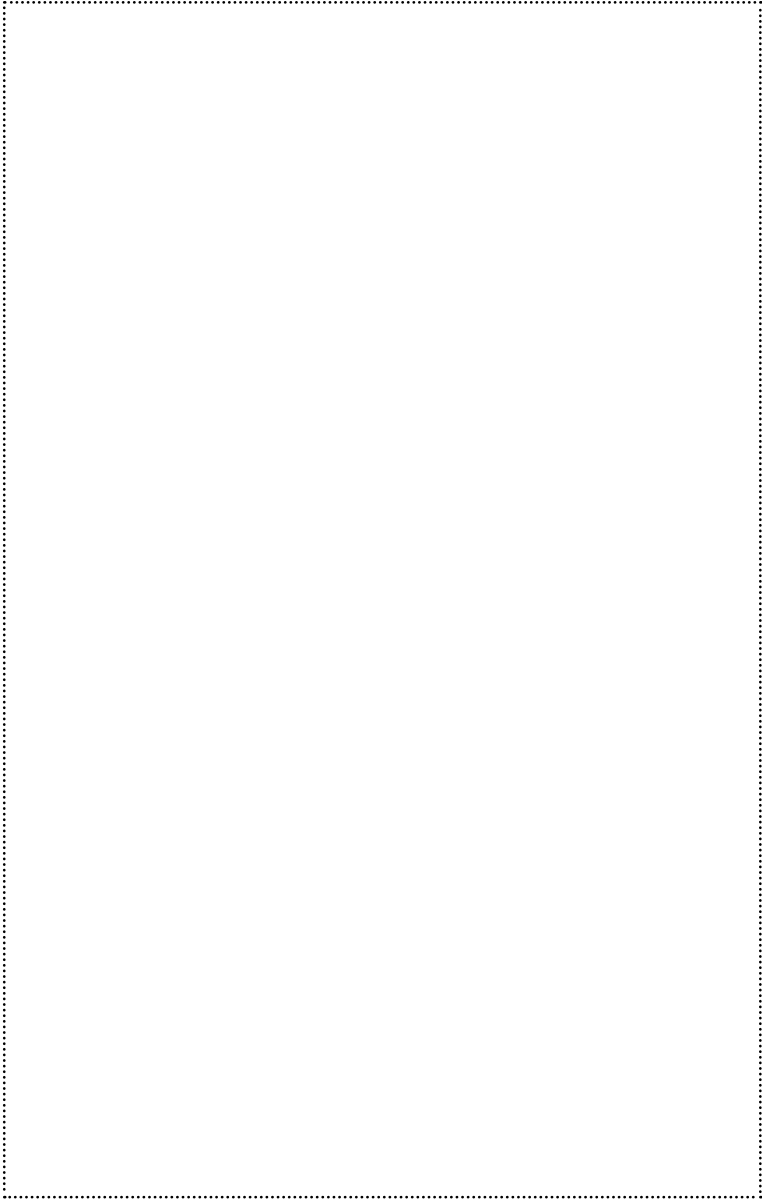
4. 요구 및 구호

- 사용자인 현대자동차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라! 공개사과 진행하라!
- 성폭력 피해자의 부당해고 및 징계철회!
- 이후 성폭력 방지대책과 교육을 보장하라!

< MEMO >

A large rectangular area enclosed by a dotted line, intended for a memo or notes. The area is currently blank.

< MEMO >



< MEMO >

A large rectangular area enclosed by a dotted line,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currently blank.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 조직위원회

공공현장조직활동가연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기아차금속노동자의힘, 대우조선현민투, 두원정공
새노회, 만도문막현장의힘, 사회보험재건투, 사회보험현장노동자회, 철도노동자회, 충북금활모, 한
라공조대전현장동지회, 한라공조평택현장동지회, 현대차아산민투위, 현대차울산민투위, 현대차전
주현장동지회, 차별없는노동자투쟁위원회, 화물현장노동자회, GM대우차민추위, GM대우차정원투,
KT민동회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 전북고속지회,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유성기업아산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쌍차지부, 콜텍지회, 도시철도해복투, 이주노동자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
능교육지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학생사람연대, 부산반자본투쟁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
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향한민중행
동(대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평등과연대를
위한민중행동(광주), 현대자동차성회로피해여성가족부농성단,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전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북본부